

# 2008~2013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2007. 12.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7791

 **농림부**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

#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보완

---

2007. 12.

농 립 부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 추진경과

- 2004년 기본계획 국회제출시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점검·보완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2006년 3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방안 검토
  - 경제정책조정회의('06.2.24)에서 결정된 추진체계에 따라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단(농림부 차관 단장)」을 구성·운영
  - 정책공모제, 설문조사(농업인 350명, PCRМ고객 3,300명) 등을 통해 현장의 정책제안 수렴
    -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안정, 재해 등에 대비한 경영위험관리, 직불제 확대, 연금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선호
  -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대책 협의회, 투융자 평가 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 및 투융자 조정방향 협의
- 기본계획 보완방향은 소비자 지향적인 농식품정책을 강화하고, 전업적 농업경영체 중심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중점
  - 기본계획 보완 확정은 한미FTA 협상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2007년으로 연기
- 대내외 여건변화와 지난 4년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보완하였으며, 중앙농정심의회('07.12.20) 보고를 거쳐 확정
  - 한미FTA('07.4.2, 타결)에 대비한 국내보완대책 발표(11.6)
    - \* 한미FTA 대책사업으로 향후 10년간('08~'17)간 20.4조원 투융자 계획

# 목 차

제1편	지난 4년간 추진상황 평가와 보완 방향	1
I.	추진상황 평가와 개선 과제	3
II.	보완 방향	14
제2편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보완	17
I.	농업정책	19
II.	농식품정책	46
III.	농촌정책	88
제3편	투융자계획 조정	105
I.	조정 개요	107
II.	부문별 조정내용('08~'13)	109
제4편	주요 품목별 대책	121
I.	축산업 대책	124
II.	원예산업 대책	131
III.	쌀산업 대책	138
IV.	임업 대책	141
제5편	농업·농촌의 미래상	147

## 제1편

# 추진상황 평가와 보완 방향

# I. 추진상황 평가와 개선 과제

## <'04.5. 기본계획 개요>

- ① FTA, DD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04~'13) 수립
  - 대책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투융자계획 함께 마련
- ② 농정패러다임을 여건변화에 맞춰 수정·보완하고, 농정체계를 농업의 체질강화, 소득·경영안정, 복지증진·지역개발로 구분
  - 정책의 범위를 농업정책 위주에서 식품, 농촌정책으로 확대
  - 지원방식은 평균적 지원에서 유형별 차별화 방식으로 전환
  -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가격지지를 줄이는 대신, 직불제 확충
  - 농촌을 생산공간에서 「생산+정주+휴양」 공간으로 발전
- ③ 투융자 계획은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총규모 119조원, 연평균 6.8% 증가토록 수립
  -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하고, 농가소득·경영안정 및 농촌복지·지역개발 분야는 지원 확대
- ④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 3년마다 추진성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투융자계획을 보완기로 함

# 1

## 추진상황 평가

### 가 정책추진상황

-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 경영이양직불금을 대폭 인상하고 연금방식으로 개편('04)
    - \* 농지매도시 1회(289만원/ha) 지원에서 최대 8년간 매월(241천원/ha) 지급
  - 농지은행제도를 도입('05), 농지임대차 활성화 기반 구축
  -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품목을 확대하고 국가재보험제('05) 도입
    - \* '04 → '07 : (농작물 재해보험) 6개 → 10, (가축공제) 5개 → 11
-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불('05)을 도입하는 등 각종 직불제를 확충
  - 조건불리('04)·친환경축산('04)·경관보전('05) 직불제 신규 도입
    - \* 직불성 예산비중은 '04년 13.1%에서 '06년 23.6%로 당초 목표('08:22.6%) 상회
- 농식품안전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및 지원 확대
  -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05), GAP, 이력추적제 추진근거 마련
    - GAP·이력추적제 시범사업('04~'07), GAP 표준재배지침 마련
  - 축산물 HACCP 시행('06:431개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07)
  - 유기질 비료지원('04 : 60만톤 → '06 : 120) 확대 등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 건강·연금보험료, 영유아양육비, 자녀교육비 등
    - \* 건강보험료 경감률 : ('04) 30% → ('05) 40 → ('06) 50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택개량 용자조건 개선 등 추진
    - \* 주택개량용자 금리 : ('03) 5.5% → ('04) 3.9% → ('06) 3.4%



<참고>

##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주요 추진실적('04~'07)

구분	주요정책	로드맵('04~'07)	추진 실적	비고
농업 체질 강화	시장지향적 농업 구조	○ 농지제도 개편('04, 농지법 개정) - 비농업인 농지소유상한 확대 -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	○ 농지법 개정, 반영('05)	완료
		○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 연금방식 개편('04) - 진흥지역 밖 우량논과 진흥 지역내 밭으로 확대('05)	○ 연금방식(분할지급) 개편('04) ○ 진흥지역 밭으로 확대('08) * 한미FTA 국내대책('07.6.28)에 포함	일부 완료
		○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 비축제 도입('05)	○ 양곡관리법 개정, 반영('05)	완료
		○ 최저보장가격제도 개편('06) - 계약재배 방식으로 개편	○ 계약재배안정화시범사업 추진('06.2~'07.12) -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개편	완료
		○ 농지은행제도 도입('05)	○ 농지법 개정, 반영('05)	완료
	친환경 농업 안전성 제고	○ 친환경농산물 생산 : 5%('05)	○ ('05) 4.4% → ('06) : 6.2%	완료
		○ 유기질비료 공급 * ('04) 60만톤 → ('05) 70	○ ('04)60만톤 → ('05) 70 → ('06) 120 → ('07) 135	완료
		○ GAP 추진 - 도입근거 마련('04) - 수출농산물 등 시범실시 후('05) 본격 시행('06)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5) - GAP, 이력추적제 근거마련 ○ ('03~'05) 시범사업 → ('06) 본사업 시행	완료
		○ 농산물이력추적제 추진 - 시범실시('04) - 96개 품목 확대 실시('06)	○ '03~'05 시범사업, '06 본 사업 시행 -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완료
	새로운 성장동력	○ 식품산업육성법 제정('04)	○ 식품산업진흥법 국회통과 (07.11.22, 국회본회의 의결)	완료
		○ 수출용공동브랜드 개발('04)	○ 휘모리(Whimori) 개발('05)	완료
		○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05)	○ 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07)	완료
		○ 농산물영양성표시제 도입('05)	○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06) - 약리적 효능 표시·광고 허용	완료



구분	주요정책	로드맵('04~'07)	추진실적		
소득 및 경영 안정	직불제 대폭확대	○ 직불투융자 비중 확대 * ('04) 10.8 → ('08) 22.6	○ ('04) 13.1 →('05) 13.6→('06) 23.6	완료	
		○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04)	○ 2004년 도입	완료	
		○ 조건불리 직불제 시범실시 (('04:25천ha)	○ ('04) 30천ha → ('06) 118ha →('07) 165	완료	
		○ 경관보전직불제도입('05)	○ 2005년 도입	완료	
		○ 생산중립직불제('06)	○ 고정직불 도입('05)	완료	
		○ 소득안정계정 도입('07)	○ '10년 시범사업 계획	지연	
	경영안정 장치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04) 6개 → ('08) 12 - 국가재보험제 실시('05)	○ 재해보험확대: '04, 6개→'08, 15개 ○ 국가재보험제 실시('05)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반영 ○ 축산 '09, 시설 '09 확대 추진	완료	
		농외소득 확충	○ 농촌관광마을 확대 * ('04) 32개 → ('05) 74	○ ('04) 32개→('05) 47→('07)84 - '02~'07 누계 : 274	일부 완료
			○ 농공단지 확대 * ('04) 304개소 → ('05) 324	○ ('04)305개소→('05)314 →('06)322	일부 완료
		○ 농촌관광촉진법 제정('06)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국회 본회의 의결, '07.11.22)	완료	
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	사회안전망 확충	○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04) 30% → ('05) 50%	○ ('04) 30%→('05) 40→('06)50	완료	
		○ 연금보험료 지원등급 상향 * ('04)10등급 → ('05)중위수 소득기준	○ ('04) 12등급→('05) 12→('06)13	완료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	○ 고교생 교육비 지원 * ('04) 1ha → ('05) 전농가	○ ('04) 1.5ha→('05) 전농가	완료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04) 1.5ha 미만 → ('05) 2ha	○ ('04) 1.5ha→('06) 5	완료	
		○ 여성농업인 센터 확대 * ('04) 27개소 → ('05) 34 → ('08) 163	○ ('04) 27개소→('05) 34→('07)39 * 2005 지방이양	완료	
	농촌지역 개발	○ 농촌마을종합개발 확대 * ('04) 16개 권역 → ('05) 100	○ ('04) 36권역 → ('05) 76	지연	
		○ 주택용자조건 개선('04)	○ '04, '06년도 2회 걸쳐 용자 조건 개선	완료	
		○ 경관협약 시행('05)	○ 경관협약 시행('05)	완료	

## 나 투융자 실적('04~'07)

- ◇ 4년간('04~'07) 총투융자 계획 39조 5,934억원 대비, 41조 5,1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4.8% 달성
  - 투자·보조 73%, 융자 27%로서 당초 계획(75:25)과 비슷('04~'06)
    - \* 집행실적은 3년간('04~'06) 28조 2,166억원으로 투융자 계획(28조 9,091억원) 대비 97.6% 수준
- ◇ 사업별로는 당초 계획대비 상당한 차이가 발생

① 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 : 계획대비 투융자 확보율 104.8%

- 초과 사업 : 영농규모화(확보율 104.9%), 후계농업인육성(155.8), 과원폐업지원(167.1), 가축방역(166.6), 농업종합자금(127.0), 농신보 출연(243.2) 등
  - 영농규모화사업은 쌀전업농 육성목표(7만호)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05~'06년 지원 확대(연 800억원 수준 증액)
  - 후계농업인 육성은 우수창업농(5년이상)에 대한 추가지원 소요 반영('06 : 1,038억원 증액)
  - 과원폐업지원은 복숭아폐업 수요증가, 가축방역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농업종합자금은 수요증가, 농신보는 대위변제증액 등으로 초과
- 미달 사업 : 경영이양직불(확보율 28.6%), 친환경축산직불(13.3), 친환경농업직불(41.0), 외식산업 및 전처리산업 육성(39.4), 학교급식지원(0.0), 지역농업클러스터(27.5) 등
  - 경영이양직불은 매도중심으로 설계되어 신청저조, 기타 사업은 사업수요부족(친환경직불) 및 여건 미비 등으로 실적 저조

②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부분 : 계획대비 투융자 확보율 103.6%,

- 초과 사업 : 쌀변동직불(확보율 582.7%), 농작물 재해보험(117.4) 등
  - '05년 산지 쌀가격이 전년대비 13.4% 하락하여 쌀변동직불금지금액 증가('06)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04:18.2% → '07:26.5), 보험요율('04:6.45% → '07:6.57) 증가 등에 따른 정부부담액 증가
- 미달 사업 : 쌀고정직불(91.7%), 농지매입 경영희생 지원(49.4),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23.2), 과수소득안정직불(21.9) 등
  - 쌀고정직불은 당초 지원대상 농지를 과다하게 산정, 경영희생 농지매입사업은 시범사업('06) 성격상 초기 예산반영 수준이 낮았음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및 과수소득안정직불은 발동요건 미충족 등으로 미달

③ 농산물 유통혁신 : 계획대비 예산확보율 87.5%

- 초과 사업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확보율 167.4%), 축산물 등급판정지원(121.9) 등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개소수 증가(당초 208개 →253) 등
- 미달 사업 : 농산물산지유통센터(확보율 47.8%), 양념채소 주산지 구조조정(3.3),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50.0) 등
  - 농산물 유통혁신 분야는 대체로 예산확보가 저조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 : 계획대비 예산확보율 111.0%

- 순수 생산기반정비(확보율 112.0%) 분야는 재해대비 시설 개보수 확대, 사업규모 현실화 등으로 증가
  - 배수개선(103.6%), 수리시설 개보수(110.7) 등 재해대비 예산 증가
  - 소규모용수개발(164.9%), 대구획 경지정리(121.3), 대단위 농업개발 ②(106.1), 서남해안 간척사업(114.8) 등 사업규모 현실화
- 농업기계화(59.4%)는 농기계 자금 수요 감소로 미달

⑤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계획대비 예산확보율 98.1%

- 초과 사업 : 지역개발관련 인프라(확보율 364.0%), 의료시설 지원 (206.7),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429.6) 등
  - 균형발전차원에서 도로, 상·하수도, 의료시설 등 인프라 지원 확대
- 미달 사업 : 건강보험료(68.8%), 교육여건 개선(35.3), 고교생 학자금 융자(18.6), 농촌마을종합개발(20.3) 등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직장가입자 제외, 초·중·고 교육사업의 지방이양, 주민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축소 등 원인

⑥ 산림자원 육성 : 계획대비 예산확보율 121.5%

- 산림생태계 보전·관리강화(확보율 232.1%), 산림재해방지체계 구축(110.2) 등 산림보전관리 강화추세에 부응, 예산 증가

## 다 종합평가(미흡한 점)

- ◇ 핵심추진과제 31개 중 26개가 완료되었고, 3개는 일부 완료 되었으며, 투융자 실적도 당초계획을 넘어서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정상 추진
- ◇ 그러나,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정책이 미흡하였고, 일부 투융자계획들은 현실여건과 상당한 차이 발생

□ 농가유형별로 지원을 차별화하는 정책은 실천되지 못했고, 고령농 경영이양 등 구조개선 정책의 실적이 미흡

- 쌀소득직불제 등 여전히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평균 지원
- 경영이양직불금 신청 저조 사유로는 i) 기계화로 인한 고령농의 쌀농사 용이 ii) 임대이양단가가 위탁영농시 쌀소득보다 낮음

□ 직불성 예산 비중('06:23.6%)이 당초 목표('08:22.6%)를 상회 하였으나,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충하기에는 부족

- 정부재정의 한계, WTO협정에 따른 보조금 한도 등을 고려 할 때, 현재 농가수(125만호) 수준에서는 소득보충에 한계

\*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06) : 4.8%

□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재해대비 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을 감안, 당초 감축 폭('03:212백억원→'13:108) 완화 검토

## 2

## 주요여건 변화

### 가 한미FTA 체결(6.30)

- 한미FTA협상은 '06.2월 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만에 종결('07.4.2)되었으며, 협상 결과 최종확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식 서명('07.6.30)
- 농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우리측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 적용(전체 품목의 10%)
  - 쌀은 협상에서 제외
  - (현행 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 쇠고기(40%)는 15년 관세철폐 및 동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 돼지고기(냉장, 22.5%)는 10년 관세철폐 및 동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오렌지는 계절관세·수입쿼타(TRQ) 적용
    -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수입쿼타 2,500톤
    - 비출하기(3-8월) : 관세 30%부터 시작하여 7년 철폐
- ※ 미측은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15년 이내 철폐(전체 품목수의 58.7%, 대미 수출액 기준 82%를 즉시 철폐)

#### ◇ 한미FTA로 인한 농업생산액 감소 규모(KREI)

- 국내 농업생산액은 한미FTA 발효 1년차에 1,445억원, 5년차에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는 1조 361억원 감소 추정
- 15년 동안의 평균 생산액 감소\* 규모는 6,698억원으로 추정
  - \* 이행기간이 15년 이하인 품목은 당해 품목의 이행기간 마지막 연도의 생산액이 15년차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 나 식품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

- 국민 소득 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정책대응은 미흡
  - 농약,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
    - \* ha당 농약사용량(kg) : 한국 12.8, 프랑스 4.5, 미국 2.3
    - \* 육류 1톤당 항생제 사용량(kg) : 한국 0.8, 미국 0.02, 일본 0.036
  - 국제교역 확대 등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위해요인에 대비하여 안전성 관리를 지속 강화할 필요
  -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차별화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관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스템이 부족
- 아울러, 농식품 소비 패턴의 다양화, 고급화 경향이 확산
  - 소비자 가계지출 중 농산물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가공식품 소비·외식 지출비 등의 비중 증대
    - \* 쌀소비량(1인, 연간) : ('70) 134.5kg → ('00) 93.6 → ('05) 80.7
    - \* 육류소비량(1인, 연간) : ('70) 5.2kg → ('00) 31.9 → ('05) 31.9
    - \* 도시가계 식료품지출 중 외식비중 : ('90) 32% → ('00) 39 → ('05) 49
  -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가격보다는 품질(맛, 신선도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 ① 한미FTA 등 개방확대에 대비, 농업구조조정 촉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농업의 체질 강화
- 농가유형별 정책차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편
    - 농가유형분류의 기초가 되는 농가별 경영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업농을 선정, 정책지원 집중
  - 경쟁이 어려운 고령농가 등에 대한 구조조정 보완대책 마련
    -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제를 확충하고 기타 노후생활안정 수단 보완
- ② 농가소득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수단 확대
- 한미FTA 등으로 전반적인 농업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여 농가의 농업소득안정을 지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직불제(조건불리직불 등)는 지원수준을 현실화
  -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③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육성 등 소비자지향적 농식품 정책강화
- 잔류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생산단계에서 위해물질을 차단하고 이를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강화
  - 변화된 식품유통·소비패턴(food-chain)에 따라 우리 농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정책 확대 추진

## II. 보완 방향

---

### 1 | 주요 보완 사항

---

◇ 당초('04.5)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내용을 유지하면서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 보완

#### ① 농업경쟁력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한 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

- 주업농은 「규모확대 + 경영안정 + 직불확충」으로 소득문제 해결
  - 주업농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지원, 농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수출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 경쟁력 향상 지원
- 고령농은 경영이양직불, 일자리 창출 및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노후생활안정 지원

※ 취미·부업농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정책 대상에서 제외

#### ② 직불제를 지속 확충하고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제도」 도입('10년 시범사업)
  - 쌀소득보전직불 등 각종 소득안정직불을 단계적으로 통합
- 조건불리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은 농촌사회안정 차원에서 지급단가 상향 조정

#### ③ 종자산업 등 첨단지식·기술산업 육성

- BT·NT·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농산품, 형질 전환 동·식물 개발 등 농업생명공학분야 연구 확대
-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R&D사업 비중을 '06년 21%에서 '12년 49% 수준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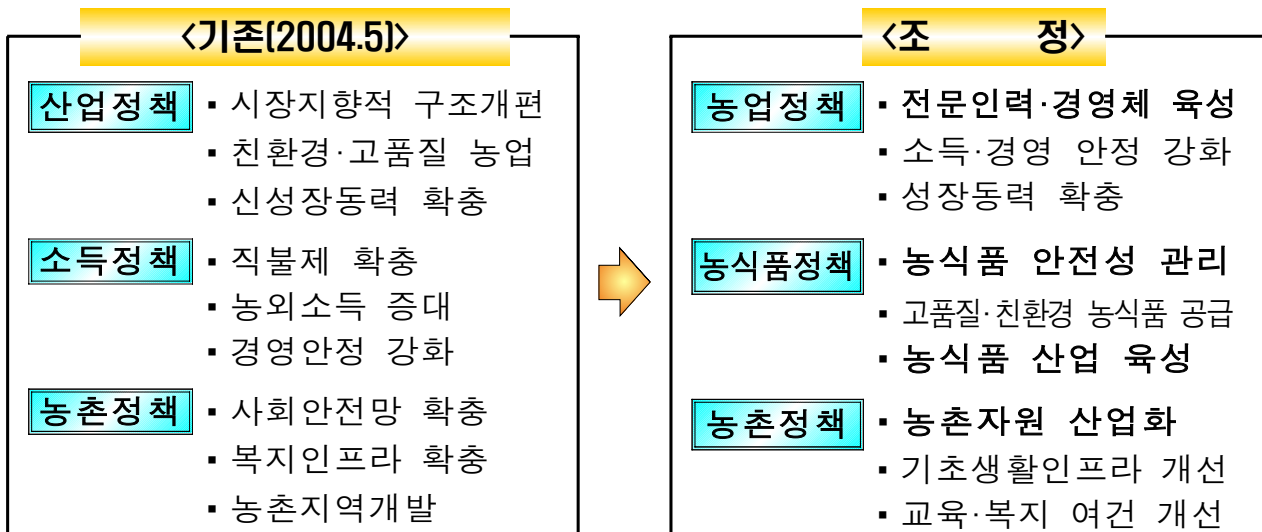
### ③ 농식품 안전, 식품산업 등 농식품 정책 확대 추진

- GAP·이력추적제·HACCP 추진기반을 확충하고 동식물 검역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광역식품 클러스터 조성,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 시설 확대 등 식품산업 육성 지원 강화
- 식량자급률 목표치(2015년)를 설정,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
- ※ 식품안전·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농식품정책을 별도의 정책축으로 설정

### ④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신활력지원, 지역특화 등 농촌자원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농촌활력증진 사업」으로 통합, 투자효율성 제고
- 농촌주택개량 및 면단위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농림부사업으로 통합하고, 상·하수도 정비는 환경부에서 주관

##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기본틀 조정〉



## 2

# 정책 추진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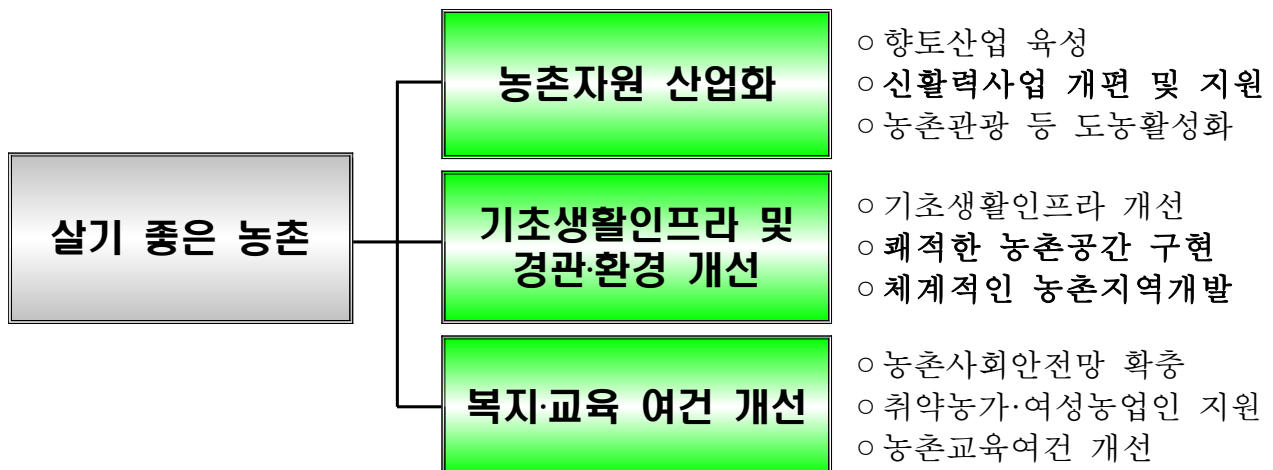
### 1 농업정책



### 2 농식품정책



### 3 농촌정책(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 제2편

#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보완

# I. 농업 정책

## 목 표

### 한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정 책

#### 전문인력·경영체 육성

- ◆ 농업등록제 도입
- ◆ 규모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 농업법인 활성화

#### 농가소득·경영 안정

- ◆ 농가단위 소득안정 제도 도입
- ◆ 경영안정장치 강화
- ◆ 경영회생지원 확대

#### 성장동력 확충

- ◆ 종자·종축 산업 육성
- ◆ 기술농업 육성
- ◆ 농식품 수출 확대

## 로드맵

구 분	<2007>	<2008~10>	<2011~13>
전문인력· 경영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체 등록 시범사업('07)</li> <li>○ 신규인력 5,000명 육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08)</li> <li>○ 경영체육성법 제정('08)</li> <li>○ 경영이양직불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 금리 다양화</li> </ul>
농가소득· 경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회생자금 지원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시범사업('10~'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본사업 실시('12)</li> <li>○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30개)</li> </ul>
성장동력 확 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에너지 시범사업('07~'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미 국산품종 보급률 15%('10)</li> <li>○ 국화 국산품종 보급률 10%('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품종 보급('13) - 장미 20%, 국화 15%</li> <li>○ 농산물수출 40억 불 달성('13)</li> </ul>

# 1

## 전문인력 및 경영체 육성

### 가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 맞춤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가등록제 도입
  - 농가단위로 당해연도 작물재배현황(작물, 면적 등),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우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농업법인으로 확장
      - \* 신청기관 : 농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
  - 농가등록정보를 토대로 농업의 주업여부·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고령농, 주업농, 취미농으로 구분
    - 취미농은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임
  - 농가의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별 정책사업 신청 등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유도
- 시범사업 거쳐, '08년 부터 전국대상 농가등록 실시
  -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등록 전산 프로그램 보완
    - \* 시범사업은 전국 9개 읍·면 7,700여 농가 대상 실시('07 하반기)
  - 농가등록제 도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07.11.22, 국회통과)'에 농가등록제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8 제정)'에 규정할 계획
- 농가등록정보를 직불제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범위 확대



## 나 고령농 경영이양 정책 확대

### □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개편

- 은퇴시점부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현행 70세까지)
- 현행 매도중심에서 매도, 임대(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 대상농지를 진흥지역논에서 진흥지역 논·밭으로 확대하고 텃밭가꾸기 등 일정면적(예 : 0.3ha이하) 영농 인정

#### <현 행>

- ◆ 대상지역 : 진흥지역 논
- ◆ 조     건 : 농지매도 조건
- ◆ 신청연령 : 63~69세
- ◆ 지급기간 : 70세까지(최장 8년)  
(매도) 월 241천원/ha
- ◆ 지급금액 : (임대) 2,977천원/ha  
\* 지급상한 : 2ha
- ◆ 시행기간 : '97~'13년



#### <개 선>

- 진흥지역 논·밭
- 매도·임대은퇴 동일단가
- 65~70세
- 75세까지(최장 10년)  
(매도) 월 250천원/ha  
(임대은퇴) 월 250천원/ha  
\* 지급상한 : 2ha
- 협정 발효후 5년  
\* 평가 후 필요시 연장

- 시행초기에는 경영이양직불제와 기존 직불제(예 : 쌀직불제 등)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등의 사업 중에서 고령 은퇴농에게 적합한 일거리 적극 발굴

- 경관개선 활동, 산불방지감시, 가축방역 활동, 농촌체험 가이드 등

## 다 주업농의 규모화 및 경영능력 제고

- 주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적극 지원
  - 토지집약이용형 농업(쌀, 노지채소, 과수 등)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 적극 알선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소득세법시행령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줄여 임대차 활성화 유도
      - \* 양도세율 60%→ 9~36% 인하효과, 부재지주의 쌀 직불금 수령 방지 기여
  - 시설형 농업(시설채소, 화훼, 축산 등)은 시설 및 장비 구입 자금 지원을 통해 사용 연수가 오래된 시설 보수·교체 유도
    - 시설 현대화장비 구입자금 이자율 차등 또는 일정비율 보조 지원
- 주업농을 대상으로 신기술·경영능력 중심의 전문교육 강화
  - 23개 자조금 조성단체 중심으로 품종선택에서 마케팅까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추진
  - 지역별 농업교육기관인 농촌지도조직·농협·대학 등이 연계하여 지역 경제품목의 고수익 실현을 위한 특성화 교육 실시
  - 농가재무관리 등 경영 및 브랜드 교육 등 확대
  - 경영수준별 교육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등급분류제 실시
- 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 농업교육·컨설팅사업의 통합기획·조정 및 관리·평가 기능을 담당할 (가칭)농업교육컨설팅관리센터 설립 추진('09년)
  -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을 구축, 교육계획 등을 홍보
    - 분야별 전문강사, 교육장 pool지속 확충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라 창업농 육성

- 매년 신규인력 5,000명 확보를 목표로 후계 농업인력 양성
  - 농업인력 양성과정을 진입경로별로 다양화하고 체계화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 교육과정을 보완('07)하고 농업계 대학에 '농업경영자과정'을 설치, 창업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이후 새로이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신규 등록 허용
  
- 매년 1,500명 수준의 우수 후계인력을 창업농 등으로 선발, 정책적 지원 집중
  - 창업농 先교육 後선정 방식을 강화하여 교육평가결과를 대상자 선정 및 정착자금 지원 결정에 반영
    - 창업농 교육에 토론식 수업방식 도입, 기업가정신, 영농설계기법, 경영자금 및 신용관리 등 현장감 있는 교육 강화
  - 초기 정착에 성공한 창업농 대상으로 추가투자 지원을 통해 조기 경영규모 확대 유도
  
- 창업농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확충
  - 농지 매입·임대차 알선 및 농기계 임대시 창업농 우선 지원
  - 창업농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후견제 강화·교육쿠폰제 도입
    - 지정후견인 또는 지역단위 공동후견 방식 등 다양한 방식 허용
    - 창업농 선정후 3년동안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기술·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의 교육쿠폰 지급제 도입('08년)

## 마 농업법인 활성화

- 농업법인체에 전문경영인 영입 촉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 추진
  - 대표자가 농업인일 것을 삭제하고 집행이사의 농업인 구성을 1/2에서 1/4로 완화
    -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2003.1.1
- 농업전문투자조합 등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
  - 과거실적과 담보를 기반으로 한 융자지원 위주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지원 방식으로 전환
    - 농업전문투자조합을 '11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
- 전문인력 고용, 유통 및 판로 확보 등 경영여건 개선 지원
  - 우수 농업경영체가 회계·경영·전산전문가 채용시 장려금 지원
  - 전사적 자원관리(ERP)·공급망·고객관리 정보시스템 지원
    - 정부가 하드웨어(컴퓨터, 응용프로그램, DB, 통신, 보안 등)를 통합 구축, 개별 경영체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통합시스템 활용
- 농업법인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
  -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 확충 ('04 : 수도권 3개소 → '07 : 전국 9)
  - 혁신형 농기업(Inno-biz)에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우대

## 바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

- 정예농업인력의 20%를 여성농업인으로 육성
  - 후계농 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제에 여성 선발 우대(20% 범위)
    - 35세미만 창업 후계농업인 선정시 여성농업인에게 가점 부여
  - 한국농업대학 입학 정원의 30%까지 여학생 우선 선발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쉽 향상 교육 확대
  -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시 여성농업인 선발 우대
  - 여성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 강화
- 가족구성원의 농업경영 참여에 따른 성취감 고취와 경영개선을 위한 '농가경영협약' 추진
  - '농가경영협약' 농가에 대한 창업농 및 후계농 선발 우대,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132농가 시범협약 추진('07)
- 읍·면장이 '농업종사사실'을 확인하는 '농업인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규 보완
  - 농업·농촌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

## 사 수요자중심의 농업금융제도 개편

### □ 맞춤형농정 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체제 개선

- 사업타당성 위주의 금융평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시스템 개선 및 농신보 신용평가기구 구축
- 창업농의 영농 정착, 전업농의 안정적 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금리, 상환기간 등을 차등 적용
- 정책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연계하여,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출 채권의 건전성도 확보

\* 정책자금 지원체제 개선방안 마련('07년), 관련사업 개선 추진('08년 이후)

### □ 담보력이 취약한 농업인 등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강화

- 기금 운용을 '08년까지 정상화(충당금의 100%적립)하고, '09년 이후 보증여력 확충을 위해 적정 소요의 정부 출연

\* 정부출연(억원) : ('06)5,780→('07)7,357→('08)6,840→('09)5,673→('10)4,615

### □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확립

- 단계적으로 모든 농업정책자금을 대상으로 확대

	'04~'06	'07~'08	'09~'13
개방 대상	· RPC운영자금 · 농기계구입자금 · 축산발전기금	· 후계농 자금 등 · 용자사업의 50% · 이상 개방	· 모든 용자사업 (100%) 개방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정책자금 관리 범위(농특회계 용자금 대상)를 확대하고, 검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검사 시스템 구축

## 아 농지제도 개편

- 젊은 농민에게 농지를 집중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60%에서 9~36%로 인하 효과
  - 제도개선 이후에는 매년 단속기간을 정하여 불법 소유 및 불법 임대차 적극 단속
  
- 상속 농지의 소유 범위 확대 추진
  -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 농지는 1ha까지, 농지은행에 임대할 경우에는 3ha까지 소유 허용
  - 1ha 초과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할 경우 상한 없이 소유 허용
    - \* 이농의 경우, 농지는 1ha까지만 소유 가능. 다만, 농지은행 임대시 1ha 초과분도 계속 소유할 수 있음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비축사업 도입 추진
  -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농지수급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농지은행에서 농지매입 및 비축 실시
    -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법적근거 마련('05)
  
- 농촌자원 산업화 및 농촌투자 유도
  -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진
  -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제한 완화(3천m<sup>2</sup>→1만)
  - 국토의 용도구분상 개발 등 토지의 공급원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권한 확대(20ha → 50)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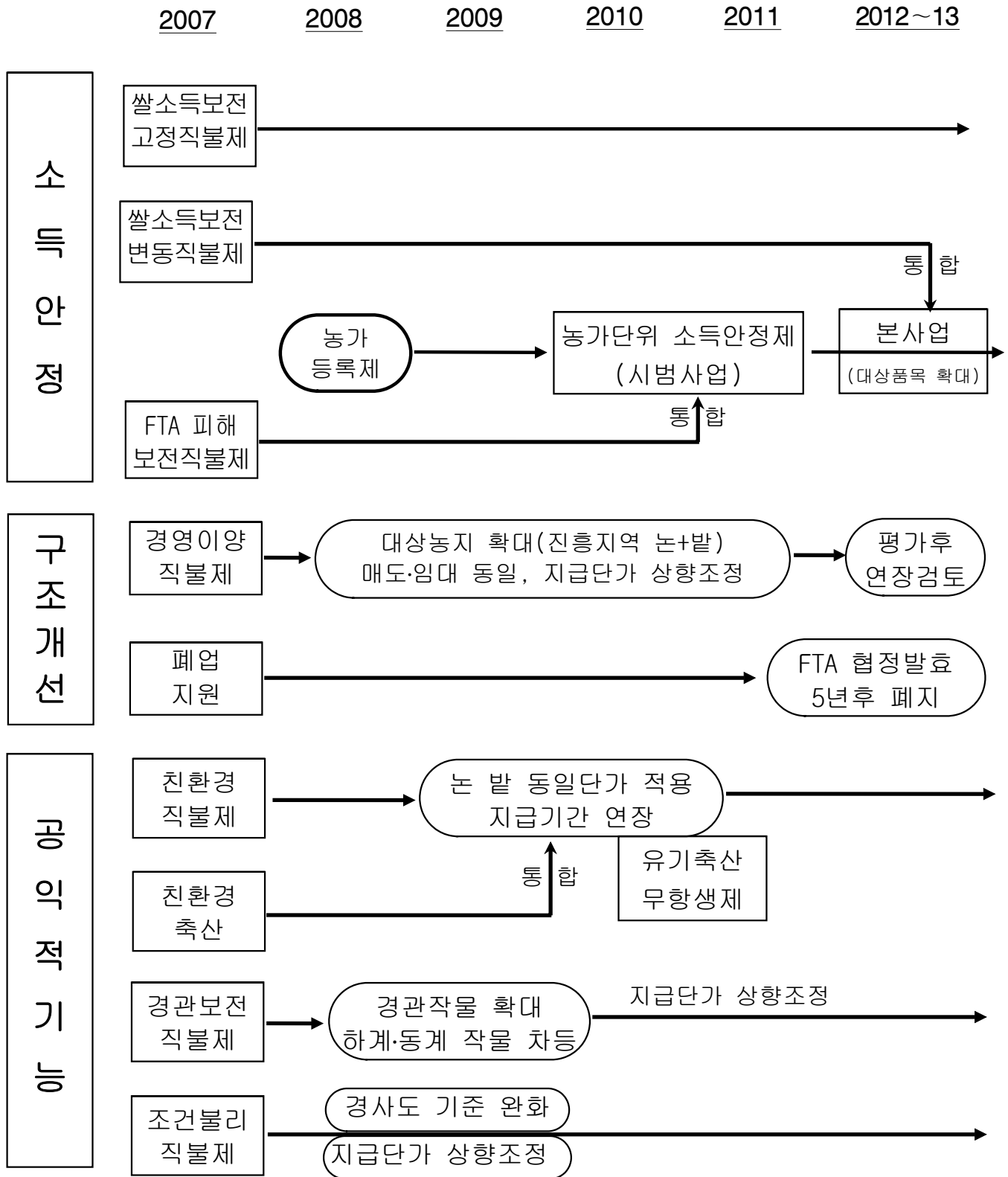
## 농가 소득·경영 안정

### 가 직접지불제 개편

◇ 개방확대에 대비,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내실 있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

- 개방확대로 인한 농업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형 직불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통합
  - 주업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밭작물, 과수, 축산을 포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 FTA 피해보전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송아지생산 안정제 등을 폐지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에 흡수
    - WTO 보조금 한도 등을 고려, 쌀 고정직불제는 당분간 유지
  - 취미·부업농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직불금 지급여력 확충
-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직불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
  -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면적과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도로변 꽃길 조성 등 새로운 영역 발굴
  - 조건불리 지역사회 유지 및 활력증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사도 기준을 완화 및 지급단가 상향 조정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밭 단가 일원화, 지급기간 연장 및 축산분야 신규 도입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 순환 농법을 적극 활성화

# 직접지불제 연차별 추진 계획



## 나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제도 도입

- ◇ 농업소득 안정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도 도입을 추진
- ◇ 농가등록제 실시, 농가단위 경영정보 파악, 각종 직불제(쌀소득직불금 등)의 통합 등 제도도입 기반을 연차적으로 구축

### □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개요

- 일정연령 미만(예 : 70세)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일부(예 : 80%)를 보전

### □ 도입 추진 일정

- (제1단계) 한·미 FTA 비준 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추진기획단(농림부)」을 설치('08년)
  - \* 발동요건, 지원대상 농가, 대상품목 선정, 지급한도 등 제도도입 방안 및 일정 구체화 등 수행
- (제2단계) 농가별 경영자료 축적을 위해 농가등록제 본격 실시('08년)
  - \* 농가별·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조수입 등 관련 통계 시스템, 소득파악시스템 등 구축
- (제3단계) 지역별 또는 품목별(FTA 피해품목 중심) 시범사업 실시('10~'11년)
  - \*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통합
- (제4단계) 시범사업 실시경험을 토대로, 대상품목 및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12년 이후)
  - \*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통합

## 다 | 경관보전 및 환경직불

### □ 경관보전직불 사업 체계화, 새로운 사업발굴 및 영역 다양화

#### ○ 지자체 주도의 주민 참여형 협약방식 강화

- 경관보전직불제 종합계획수립시 마을주민의 경관보전활동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마을안길 정비, 꽃길 조성, 마을주변 환경정비 등

- 지역특성에 맞추어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

#### ○ 마을주변 소규모 농경지 활용을 통한 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대상지 선정 요건 완화

- 최소면적 0.5ha(현행 1ha), 마을단위 2ha(현행 3ha)로 집단화

#### ○ 조건불리직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수혜지역을 확대

- 경사도 기준 완화(현행 14%), 지원단가 상향조정(현행 400천원/ha) 추진

\* '07년도에는 도서 지급대상을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서 전도서로 확대

### □ 생산측면에서 친환경농업, 생태계 유지·보전 적극 뒷받침

####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농법 적극 활성화 지원

- 악취방지, 축사주변 환경개선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 ○ Codex 유기농 기준 실천, 생물다양성 유지, 수질정화 작물 재배 지원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

## 라 경영안정장치 강화

###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연차적으로 확대

####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11년까지 30개로 확대

- 과수작물 위주에서 논벼(수도)를 포함한 식량·채소작물 등 주요 농작물로 보험품목 확대 추진

연도	현재	'08	'09~'11
품목수	10개	15	30

\* '07년 10개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 ○ 보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범위를 지속 확대

- 향후 품목 확대와 병행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른 재해 범위 확대 추진

\* '07 대상재해 : 태풍·우박(주계약), 동상해·집중호우(특약)

-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 적용 검토

\* 밤, 참다래, 자두는 종합위험방식을 적용, 시범사업 추진('07)

#### ○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등 지원 지속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율 : 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원

\* 단, '05년 보험요율 현실화('04년 대비 50.6%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목적으로 인상보험료의 일부를 4년간 한시 특별지원 ('07 : 5.6% 추가지원)

#### ○ 농업인에게 보험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을 점진적으로 향상

- 보험가입률('07, 26.5%)을 '13년 38.5%까지 제고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공제 대상축종 확대 및 내실화
  - 대상축종을 '07년 11개에서 '10년 14개로 확대하고, 가금류 및 축사에 대한 설해 피해 보장상품 개발
    - 연차별 축종 확대 : ('08) 산양 → ('09) 토끼 → ('10) 꿀벌
      - \* '07(11)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타조, 거위
  - 가축 공제 보장비율 다양화로 농가의 선택폭 확대
  - 가축공제사업자로 농협 외에 민영보험사도 참여시켜 공제사업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서비스 질 향상 및 보험요율 인하 유도
- 농업분야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들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 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3개 재해보험을 농업전반의 자연 재해를 포괄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
  - 재해보험 관련 인력의 전문화 및 체계적인 관리조직 지속 확충
- 거대재해에 대비한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재보험기금 확충
  - '05년 도입한 국가재보험제도 및 기금의 원활한 운용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기반 강화
    - \* 국가재보험제도 : 거대재해 위험(손해율 180%초과 부분)을 국가가 인수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안정화와 민영보험사의 참여 확대 유도
  - 농업분야 보험제도 통합관리 및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재보험 기금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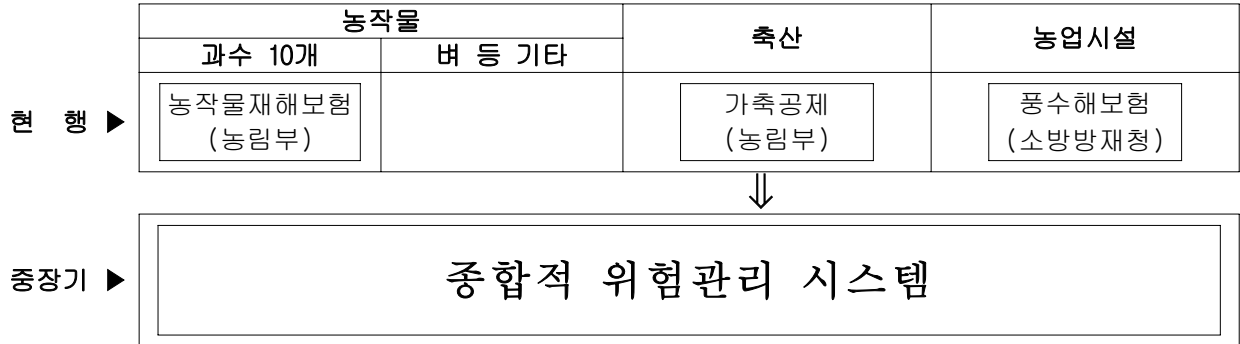
## 마 | 경영회생지원시스템 강화

- 재해, 농산물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회생자금 지속 지원
- 영농규모 준전업농(전업농의 1/2), 농업융부채 2,500만원이상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
  - 경영회생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1,000억원 수준 지원(3%, 3년거치 7년상환)
- 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제도 개선
  - 회생가능 여부 판단기준을 '부부'에서 '농가'단위로 확대
  - 사후관리 간소화로 대출 금융기관 업무 간소화(년2회 → 년1회)
- 재해피해 및 부채심화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
- 현장 농업인의 신청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 향후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도 매입하는 방안 검토
- 농업재해 피해기준, 연체금액 등 지원기준 조정·현실화
-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환매권도 보장
  -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매입가격의 1% 범위내에서 차등요율 적용



## <종합적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로드맵>

### <중장기 로드맵>



### <단계별 로드맵>

구 분	'06	1단계('07)	2단계('08~10)	3단계(11년 이후)			
보험품목수	7	10	25	30개 이상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등 추가	논벼, 채소류 등 15개 작물	기타 농작물			
농작물	과수류	사과·배 등 7개 품목	기타과수류 시범사업 및 상품다양화				
	벼	도상연습		시범사업 검토			
	시설채소류	시범사업 검토 (시설부분과 연계)					
	화훼류	시범사업 및 보험화 검토					
	노지채소류						
	특용작물						
	기타농작물	시범사업 검토		보험화 검토			
임산물	⇒ 종합적 위험관리 시스템						
가축				가축 공제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9)	타조, 거위 추가 (11)	농업재해보험으로 개편
				농업 시설	축사, 온실 등	시범사업 (소방방재청)	농업재해보험으로 통합

## 바 재해대비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강화
  -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은 안전진단을 거쳐 재해위험 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보수·보강 추진
  
-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상습 침수 농경지의 배수개선 추진
  -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보강 지원
    - 체계적인 개보수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설점검·진단정보, 개보수 실적 DB구축 등 시설물 이력관리 추진
  - 노후 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개보수·보강 지원
    - \* 국가관리방조제(103개소), 지방관리방조제(1,490개소)
  - 상습 침수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지원
    - 상습침수 농경지 188천ha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 \* ('05까지) 129천ha → ('16까지) 188
  - 홍수량 증가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아산만 배수갑문 확장 등 하구둑 구조개선 추진
  
- 치수(治水)능력 부족 시설에 대한 재해대비 시설보강
  - 재해발생시 주택,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한 시설보강으로 재해대응능력 향상

## 가 기술농업 육성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수확 후(Post-Harvest) 관리, 품질고급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집중
  - 매년 농업인, 농산업체 등의 농림 R&D 수요를 조사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유망기술 도출·개발을 병행
  - 기술농업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농림예산의 5%수준으로 농림R&D 투자를 확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R&D 분야별 전략적 투자 강화
- 농업계 이외 연구기관 참여를 확대, BT·NT·IT기술 등을 접목한 바이오센서 개발, 형질전환 동·식물 등 농업생명공학 연구지원 강화
  - 실용화를 위한 연구지원 등 산업화 중심의 농림바이오 R&D 지원 확대
    - ⇒ ('13) 농업생명공학 연구수준 세계5위, 지식재산권 보유 세계7위 도약
  - 건강·기능성 식품에 적합한 천연물질·농산물 발굴 및 가공 기술, 전통식품의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추진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 농기자재 개발
  - IT를 접목한 첨단농기계 개발로 수출경쟁력 제고
    - \* 농작업 로봇(접목 등), 시설원에 자동화 장치, 농산물 품질·안전성 판정장치 등
  - 안전성을 확보한 천적, 미생물제 등 농자재 고부가가치화
    - \* 농약대체 : ('15) 생물농약 40품목, 천적 26종 ⇒ 화학농약 30% 대체
    - \* 비료대체 : ('15) 미생물제 20종, 천연자원 이용 10종 ⇒ 화학비료 20% 대체

## 나 종자·종축산업 육성

### □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종자·종묘업체의 발전을 유도

- 농림기술개발사업을 개편하여 실질적으로 품종개발이 능력이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 지원규모 확대

\* 품종개발 지원규모 : ('06) 45억원 → ('10) 80 → ('15) 100

- 신품종 관련 R&D투자를 강화하고, 고추·배추·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연구

- 분자마커 등을 활용한 분자유종 체계 정립으로 육종연한을 단축하고 품종개발 효율성을 높여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

- 쌀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작물 해외 로열티 절감을 위해 민간육종이 어려운 주요작물에 대한 투자 지속

- 민간 참여가 어려운 장미·국화 등 원예품종 개발투자를 강화하여 '13년까지 국산품종 재배비율 제고 : 장미(30%), 국화(20%)

- 새롭게 개발된 우수 품종의 보급·판매 지원 강화

- 우수 품종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증식·채종·수매·가공비 등을 저리 용자로 지원

\* 지원규모 : ('06) 60억원 → ('08) 92 → ('15) 100

- 국가품종목록 등재 의무 완화,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조정제 신설 등

\* 종자산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의 품종개발 의욕을 촉진('07)

□ 경쟁력 있는 채소종자 중심으로 수출 확대

- 중국, 인도, 동남아 등 급격히 부상하는 종자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적응 품종 위주의 품종개발 추진
- 최고 수준의 육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추·배추·무 등은 수출전용품종 개발에 집중하여 역점수출산업으로 육성
  - '15년까지 세계 고추종자 시장점유율을 25%까지 제고(5천만불 수출)
- 수출용 종자에 대한 구매지원 및 검역 간소화 등 수출업체 우대

□ 가축개량을 활성화하여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 소 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제도 도입 및 개량농가의 등록우 관리 내실화
  - 규모화된 우수 번식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암소와 수소의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 선발(한우 20두, 젃소 3두)
- 젃소 검정 확대 및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개량 촉진
  - 고능력 수정란이식에 의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후보씨수소를 생산하고 후대검정을 통한 보증씨수소 선발
- 돼지·닭 검정시설 현대화 및 개량대상 가축 확대
  - 종돈검정소 시설을 현대화 하고 오리를 개량대상 가축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인 혈통관리 및 검정 실시
  - 종계 능력검정은 검정소·농장 검정을 병행하면서 원종계농장(GPS)·종계수입농장의 검정 참여를 확대

## 다 농식품 수출 확대

### □ 농가소득 및 식문화 확산과 관련이 높은 3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 시장조사, 상품화, 판촉 및 수입국 검역문제 해소 등 지원 확대

\* 1억불 이상 수출가능 농식품('13) :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 농식품 수출목표 : ('07) 25억불 → ('13) 40 → ('17) 60

###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안전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 수출경영체 전문화사업을 통해 조직화·계열화된 수출조직을 '13년까지 100개소 육성

\* 단지수 : ('06) 148개소 → ('07) 155 → ('10) 180 → ('13) 200

- 수출농가·업체에 대한 ID 등록, GAP 시행 및 생산이력 정보제공, 수출 컨설팅 강화 등으로 해외소비자의 신뢰제고

- 안전한 기능성 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품개발 및 수출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 김치('01년 완료) 외에 인삼, 고추장, 된장(발효콩 식품) 등 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 적극 추진('10)

- 8단계 중 '07년 현재 된장은 4단계, 고추장, 인삼은 6단계 진행중

- 수출 농산물 공동브랜드 '휘모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 공동브랜드에 대한 엄격한 품위관리·규격화, 생산이력제 도입 등

□ 동남아, 인도, 중동 등 신규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수출유망품목 개발·육성

- 신규시장 개척시 박람회 참가·수출물류비 등 인센티브 지원
  - 수출실적 평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
- '13년까지 수출유망품목의 생산·수출을 주도하는 150개의 우수농산물 생산자조직 육성
- FTA로 인한 수출효과 극대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 수립
  - FTA체결 상대국 시장조사 및 수출전략품목을 선정하여 품종개발에서부터 생산-유통-수출을 포괄하는 전략 수립

□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운영

- 전세계 130여개 재외공관을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 \* 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07.4.26)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 aT센터의 해외 마케팅 기능강화
  -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수 인력의 해외 전진배치, 해외지사 사업 내실화, 지자체·수출업체·수출농가와의 연계 강화 등
- 고유가·환율하락 등 수출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추진
  - 농산물 수출보험, 환변동 보험 활성화 및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 추진
- 수출농가가 해외시장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
  - 외국의 생산·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기술지원단'운영 강화

## 라 농업의 새로운 영역 개척

### □ 바이오에너지 작물 발굴을 통한 농가의 신소득원 확보

- 고유가 등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농가의 신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채 등의 바이오에너지 작물 적극 개발

###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07~09)'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의 국내 생산·공급 체계 구축

- \* 유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동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채 소득과 쌀보리 재배 시의 소득이 동일해지는 수준의 생산보조금 지원 (170만원/ha)

- 시범사업 기간 중 국산 유채의 생산성·경제성 분석, 농가소득 제고효과, LCA(순주기 환경성 분석) 계측 및 국내 생산기반 마련

### □ 바이오에너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실용화 연구·개발 추진

- 고올레인산·조숙·다수·동시수확형 1대잡종 유채 품종 개발
- 농업부산물 활용 기술 및 생명공학을 접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당화 기술 등 신바이오에너지원 생산기술 연구·개발
-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 농기계(파종기·수확기·건조기) 개발 및 최적 작부체계 등 생력화 시스템 개발
-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부산물의 가축사료화 및 비료화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 낙농 체험·관광목장 육성을 통한 낙농업에 대한 소비자 이해 증진

- 일정요건을 갖춘 낙농목장을 체험·관광목장으로 육성하여 도시민의 낙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새로운 수입원 개발
- 시설 설치비, 환경개선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농촌체험과는 차별화된 낙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낙농체험에 참가한 도시민을 우유 써포터즈로 활약토록 관리
-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본부를 중앙 및 지역단위로 구성하여 낙농가 자율의식 운동 전개

□ 레저·웰빙 추세에 대응한 마필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유형의 축산기반 확충

- 승마산업 육성, 경주마 생산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
  - 경주마 능력 향상을 위한 개량 목표 설정('07 상반기) 및 농가의 종빈마 도입 지원 등

□ 선진국형 동물 보호·복지 달성을 위해 시설 지원 및 홍보 추진

- 산업·농장동물의 사양, 유통, 도축 등 전과정에서 복지 지침 마련
- 고부가가치 축산업으로서 반려동물·실험동물의 산업화 추진
  - 생산·공급 체제 정비,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등
- 반려동물 등록제('08: 개 → '11: 고양이),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제 등 시스템 구축
- 축산농가, 일반국민 동물보호·복지 관련 교육·홍보 강화

## 마 경제림 육성 및 관리체계 구축

### □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산림자원 조성·관리

- 경제림육성단지(450단지, 292만ha)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추진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산림자원의 핵심지역으로 육성
- 2012년까지 215만ha의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실시
- 향토수종인 소나무·참나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
  - \* 소나무 42개 권역 427천ha, 참나무 47개 권역 450천ha

### □ 유�휴토지 조림 및 지역특색숲 조성

- 유�휴토지 조림 5개년계획('07~'11, 2,500ha)을 수립하여 다락밭 등 조림 추진('07계획 : 837ha)
  - '12년 이후 탄소흡수원 확충과 연계하여 조림 확대
- 울진 금강소나무림, 장성 편백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숲 육성

### □ 전국의 산림을 기능별로 구분·관리

- 산림의 생태적인 건강성 유지 및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 되도록 기능을 구분하여 관리(국유림)
  - 수원함양, 재해방지, 생활환경, 산림휴양, 생태보전, 목재생산림
- 국유림 위주의 산림기능 구분을 '09년부터 공·사유림까지 확대

## 바 산림의 복합적 이용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 □ 산림소득 전략품목 육성

#### ○ 고품질 밤생산 및 경쟁력 강화

- 재배자가 선호하고 수출에 유리한 고감미·기능성 신품종 개발
- 작업로 시설 확대 및 기계장비 지원 등 경영기반 조성
- 노령목 갱신 및 산성토양 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사업 지속 추진

#### ○ 표고산업의 우량종균 및 재배 기술개발로 경쟁력 강화

- UPOV에 대비한 신품종 종균개발 강화
- 표고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연중생산시스템 구축 및 톱밥표고재배 확대

#### ○ 새로운 유망 소득품목인 장뇌삼, 약용식물 및 개발 잠재가치가 큰 산머루, 오갈피 등의 집약 재배를 위한 생산단지 조성

- 생산단지조성 : ('05까지) 27개소 → ('10까지) 87 → ('13까지) 123

### □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 지역특산 임산물의 향토 브랜드화, 명품화 추진

- \* 지리적표시등록제 : ('05까지) 1건 → ('10까지) 15 → ('13까지) 20

#### ○ 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생산자조직 중심의 저장·가공·유통체계 확립 및 가공품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 \* 저장·건조시설 : ('05까지) 372개소 → ('10까지) 708 → ('13까지) 906

-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05까지) 400명 → ('10까지) 1,000명 → ('13까지) 1,000명

- 향암, 향산화 물질 등 신물질 개발을 통한 BT산업 육성

## II. 농식품 정책

### 목 표

고품질·안전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 정 책

####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 ◆ 위해물질 조사확대
- ◆ 이력추적제 확대,
- ◆ 가축질병 근절
- ◆ 수입농산물 관리강화

#### 고품질·친환경 농식품 공급

- ◆ 브랜드 중심 농식품 공급체제 구축
- ◆ 친환경농업 육성
- ◆ 농산물 유통개선
- ◆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 농식품산업 육성

-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 ◆ 올바른 농식품 소비 지원

### 로드맵

구 분	<2007>	<2008~10>	<2011~13>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 조사 강화</li> <li>○ 쇠고기 이력추적제 근거법령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li> <li>○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고기 이력추적제 대상품목 확대</li> <li>○ 항생제 수의사 처방제 시범 도입('11)</li> </ul>
고품질·친환경 농식품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가공식품 품질 인증제 도입('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소비지매장 개설('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50개소 조성('13)</li> <li>○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12)</li> </ul>
농식품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진흥법 제정</li> <li>○ 전통식품 세계화 종합대책 수립('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 클러스터 추진</li> <li>○ 식생활지침(표준식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편의성 등을 갖춘 농식품 개발·보급</li> <li>○ 농산물 통합규격 제도(KAS) 도입('10)</li> </ul>

# 1 |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 가 | 재배과정 모니터링, 이력추적 강화

### 농산물

- 조사범위를 잔류농약 중심에서 중금속·미생물 등 위해물질 전반으로 확대하고, 정밀분석을 통한 조사 강화
  - 조사품목을 농업용수·토양·자재 등으로 다양화하고, 조사대상 물질도 농약 위주에서 중금속, 미생물, 독소류 등으로 확대('07이후)
    - \* 안전성 부적합률이 높은 깻잎, 상추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 농산물 안전성 정밀분석실 설치·장비 확충 및 정밀분석 강화
    - \* 정밀분석건수/소요예산:('06) 24천건/100억원 → ('10) 61/165 → ('13) 81/226
-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 농산물표준재배지침을 추가 개발하여 GAP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 GAP 대상품목 : ('06) 96개 → ('10) 120 → ('13) 150
  - 생산자단체, 대형소매업체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13년까지 50개 내외의 GAP 민간인증기관을 지정
    - \* 연차별 인증기관 지정계획 : ('06) 21개소 → ('10) 40 → ('13) 50
  - 농산물 유통센터(APC)에 위생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규 APC에는 GAP 위생시설 설치를 의무화
    - \* APC 위생시설 지원계획 : ('06) 11개소 → ('10) 46 → ('13) 92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를 점차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DB 등 구축

○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되, 단계적 의무화 검토

\* 이력추적관리제도 참여 농가(천호) : ('06) 3 → ('10) 50 → ('13) 100

## 축산물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잔류 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 잔류물질검사 대상항목을 확대하고, 총 잔류물질 검사 중 규제검사의 비중을 확대('06년 11% → '13년 30%)

○ 항생제 등의 잔류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금지,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강화

○ 사료내 중금속(비소 등)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

□ 항생제 사용량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 항생제 사용량 : ('06) 0.8kg/육류톤당 → ('10) 0.4

○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막기 위해, 사료내 첨가 항생제 지속 감축('08년 25종 → 18종)

○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강화

- 항생제 내성균 감시시스템 구축

- 항생제 수의사 처방제 시범사업 추진('11년, 도별 1개군)
  - 이에 앞서 준비단계로 가축질병보험제도 도입, 지역거점 동물병원 설립, 수의사처방 동물용의약품 선정 연구('10년) 등 추진

□ 축산물 사육·유통단계 및 사료공장의 HACCP 적용 확대

- 사육단계 축종별 HACCP 지침 및 모델 개발을 완료('07)하고, HACCP 적용 희망 농가에 컨설팅 지원
  - HACCP 지침개발 : ('06)돼지, ('07)젓소·한우, ('08)산란계·육계
  - \* HACCP 지정사업장('07) : 사료공장(68), 도축장(144), 축산물가공장(567), 판매장(7) 등

○ 도축장 HACCP 운영 내실화를 위해 HACCP 운영 평가 강화

- 소비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도축장 HACCP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차등 지원

○ 사육부터 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대한 HACCP 지정 확대 ('06년 431개 → '13년 13,218개)

□ 이력추적관리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관련 법령 및 추진체계를 정비('07년)하고, '08년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08 : 200만두)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 업소를 단계적으로 확대

- \* 2007년부터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구이용 쇠고기 취급 일반음식점 적용
- \* 적용대상(300㎡ → 100㎡ 이상) 및 적용품목(쇠고기, 쌀 → 돼지, 닭고기, 김치 추가) 확대 추진

## 농식품 품목별 안전성 관리 대책

품목	안전성 관리대책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 잔류농약 조사 중점 실시 및 카드뮴·납 안전성조사 확대</li> <li>○ GMO표시 단속 강화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도입</li> </ul>
과실· 채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깻잎, 상추 등 취약품목의 잔류농약 중점조사 및 중금속 조사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환경 및 생식채소류에 대한 중금속·미생물 모니터링 조사 확대</li> <li>-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납품원료에 대한 안전성조사 강화</li> </ul> </li> <li>○ 수출단지, 주산지 등 농업인에 대한 안전성 교육 확대</li> <li>○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품 생산·유통 확대</li> </ul>
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관리 가능한 계약재배확대, 이력추적제, 지리적표시제 본격 추진</li> <li>○ 재배포장에 대한 안전성검사 확대 및 재배농가에 대한 안전성 교육 확대</li> <li>○ 내병성·내재해성 품종개발 및 보급확대</li> </ul>
쇠고기·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안전성 검사(식육중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강화 및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li> <li>○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적용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적용 대상 확대</li> </ul>
닭고기· 오리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안전성 검사(식육중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강화 및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li> <li>○ 유통 중 미생물의 재오염 방지 및 수입산과 식별 등을 위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li> </ul>



## 나 가축질병 근절 및 검역 검사 강화

- 소 브루셀라는 2013년, 돼지콜레라는 2010년까지 청정기반 조성
    - 소부루셀라병은 단기간내 근절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사람에게 대한 감염을 예방하는데 중점
      - 1세이상 모든 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발생농장 인근 지역(500m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검사 의무화 등
    - 돼지콜레라는 예방약 100% 공급 및 혈청검사 실시,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게 과태료 부과 등 방역대책으로 청정화 기반 구축
      - 예방약 40백만두(34억원) 공급 및 혈청검사 210천두 실시
  - 해외유입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강화로 조기 종식 추진
    - 질병별 표준절차(SOP)에 따라 방역활동을 전개
      - 지자체 중심으로 이동제한, 살처분, 폐기 등 방역 조치
      - 구제역·AI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차별화된 대책 추진
    - 주요 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사육 제한, 구상권 청구 등 제재 강화
    - 방역소홀 지자체 제재 또는 불이익 조치 강화로 참여 확산
      - 예방접종률 저조 등 방역 부진 지자체 공개
      - 정기평가 실시에 따른 방역비 등 축산사업비 차등 지원 등
      - 해당지역 농가·축산시설 집중 관리로 방역규정 위반 감시 강화
- \* 발생건수 : ('03) 72건 → ('04) 10건 → ('05) 5건 → ('06) 2건

□ 식물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최첨단 검역장비 및 시설 보강

○ 현대화된 장비로 「국가 식물병해충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축

- 병해충 화상진단 네트워크, PDA 등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

○ 정밀한 병해충 진단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첨단 검사장비 확충

- 노후장비는 연차적으로 첨단장비로 교체

\* 식물검역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식물검역연구 전담기관」 설립·인력 보강

□ 해외병해충 검역시스템을 개선하고 감시활동 강화

○ 식물검역 전용장소(P.Q.zone)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검역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

- P.Q. zone은 우선적으로 재식용 및 공항·항만 밖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식물류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후 확대

\* 장기적으로 P.Q.zone내에 식물검역전용 X-ray 설치방안 검토

○ 신속한 검역 대응을 위한 해외검역정보 수집·분석 강화

- 수집정보는 D/B화하고 공유시스템을 구축, 수출입업체 등에 제공

○ 수입농산물의 불법·편법 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

- 명예감시원 확대로 위반 감시체계 보강 : ('06) 120명 → ('13) 1,000

## 다 수입농산물 안전 관리체계 강화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제도를 가공·포장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단계까지 확대
  -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은 '06년 531개에서 '13년 580개까지 확대
  - '07년 구이용 쇠고기, '08년부터 쌀에 대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추진
  
- 원산지 단속 인력 확대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한 단속 내실화
  - 단속 및 수사전문가를 '13년까지 200명 이상으로 확대
    - \* 단속·수사 전문가 양성 : ('06) 44명 → ('07) 64 → ('10) 130 → ('13) 200
  - 부정유통의 대형화, 지능화에 대응, 입체적인 단속이 가능한 기동단속인력을 '13년까지 110명 이상으로 확대
    - \* 기동단속반 : ('06) 77명 → ('07) 90 → ('10) 95 → ('13) 110
  
-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및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 수입농산물 저가 신고 방지를 위한 해외정보 수집 및 전파 강화
    - \* ('06) 6개국 50품목 → ('10) 14개국 90품목
  - 민간신고비율을 '13년까지 25%이상 확대(명예감시원 25천명 운영)
    - \* 적발대비 신고비율 : ('06) 12% → ('07) 15 → ('10) 20 → ('13) 25

## 가 브랜드 중심의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 '13년 브랜드 경영체 육성 : 쌀 100개, 채소 25, 과수 26, 축산 80 ◆

## 쌀브랜드 육성

## □ 2013년까지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 추진

○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를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 농가조직화, 브랜드 컨설팅 비용 등을 집중 지원

- 시설현대화 : 개소당 20억원 기준 (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개소당 2억원 기준 (국고 50%, 지방비 50)

\* '13년까지 우수브랜드경영체 등에 건조·저장시설 1,300개소 신규 지원

○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가 고품질브랜드 쌀 생산·유통전담

- 고품질브랜드쌀 취급비율 : ('07) 10% → ('08) 15 → ('10) 28 → ('13) 50

○ 브랜드경영체의 사후관리를 강화

- 우수브랜드 경영체에 시상금 지급, 운영자금 우대지원 및 홍보지원

## □ 브랜드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 추진

○ 개별브랜드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시·군단위 공동브랜드 활성화

- 시·군단위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가 공동사업법인(조합공동, 사업연합) 형태로 광역화 되도록 유도

○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및 브랜드마케팅 홍보를 전개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채소브랜드 육성

-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 2013년까지 25개소 내외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
  - 브랜드 관리 지원: 조직결성, 교육·컨설팅, 마케팅 경쟁력 제고, 홍보비 등
  - 비용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 종합처리시설 지원
  - 원료확보 및 비가림 등 고품질 생산시설 자금 지원
  
- 브랜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출하조절 추진
  - 브랜드 상품에 대한 품위규격을 설정하고 참여농가 재배지도관리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와 연중 출하를 위해 참여 농가의 출하시기 조절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판로 확보지원
  - 브랜드 경영체에는 농업종합자금,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민간수매지원사업, 채소계약재배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
  - 상품성 향상 및 지속적인 거래처 확보로 안정적 판매 추진
    -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
  
- 매년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과실브랜드 육성

- 2013년까지 26개 내외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여 과실류 수급조절과 유통개선을 주도하도록 지원
  - 과일 브랜드는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공동브랜드로 육성
    - 전국공동브랜드 : 지역공동브랜드와 연계하여 여러 과종(사과, 배, 단감, 감귤)을 취급하는 종합 브랜드로 육성(중앙정부)
      - \* 회원농가의 기술지도, 마케팅 운영 지원, 홍보 및 소비촉진,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중앙정부)
    - 지역공동브랜드: 거점APC 중심으로 과종 중심의 브랜드 경영체를 2013년까지 25개소 육성(지방정부)
      - \* 품질관리, 농가교육, 기술지도,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지원(지방정부)
- 소규모 지역단위의 군소 브랜드를 흡수, 거점 APC 중심의 대표브랜드 육성
  - 과실 주산지의 거점 APC 유통주체가 브랜드 경영체로서 APC를 운용하고, 생산·유통을 주도적으로 계열화
  - 거점 APC별 사업권역내 고유 브랜드와 과실 대표브랜드 (Sunplus)를 유통전략에 따라 연계 사용
    - 독자적인 브랜드와 상품화 전략하에 농가회원제(계약출하), 공동 계산·선별 생산·유통체계로 전환
    - 브랜드 품질규격을 당도중심으로 개편하고, 선진 마케팅 등을 통해 브랜드 파워 제고

## 축산브랜드 육성

- 2013년까지 총 80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  
(‘13년까지 사육두수 중 한우 50%, 돼지 70% 점유 목표)
  -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한 경영자금 지원
    - 지원받은 경영체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게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
  - 조합간 공동사업의 형태로 광역브랜드사업 추진시 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광역브랜드 결성을 유도
  
-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지원 강화
  -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해결하여 우수 브랜드 육성기반 확충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지속 추진
  - 한우, 돼지에서 육우, 육계까지 인증대상에 포함(’06년)하여 추진
  - 도축장 HACCP 운영평가 결과 등을 우수브랜드 인증 신청 자격에 반영하여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 “우수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등 우수 브랜드 홍보 강화
  - “축산물브랜드전시회”를 통해 우수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소비자 인식제고 및 판로개척
  - 우수 브랜드 홍보책자 발간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지속추진

## 나 친환경 농업 육성

### □ 친환경농법 확산을 적극 지원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별 친환경농업실천 표준기술 개발
  -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운영 ('05~'09년간 50억원 지원)
-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로 농약 및 화학비료 감축 추진
  - \*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06) 120만톤 → ('09) 210 → ('13) 300
  - \* 천적방제 면적 확대 : ('06) 1,000ha → ('09) 2,500 → ('13) 4,200
- 토양개량제는 '08년부터 3년 1주기(현행 4년 1주기)로 공급하고, 2013년까지 100% 입상화('06년 : 47%)하여 개량효과 제고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추진
  - 논·밭 지원단가 일원화, 지급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0)
  - \* 친환경직불 지급단가('06년, 유기기준) : 밭 794천원/ha, 논 392천원/ha

### □ 집단화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추진

- 시·군 중심으로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1,000ha 수준의 대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 조성계획(누계) : ('06) 3개소 → ('09) 17 → ('13) 41
- 읍·면 중심의 10ha 이상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 조성계획(누계) : ('06) 820개소 → ('09) 980 → ('13) 1,280



##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대책 추진

- '12년까지 수도권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 출하선도금, 계약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통 활성화자금 및 직거래 매취자금 등 지원 확대

\* 유통자금 지원액 : ('07) 250억원 → ('08) 460

-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조성확대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지원

\* 자조금 조성액 : ('06) 8억원 → ('09) 20 → ('13) 30

- 친환경 농산물 소비지 매장 개설 지원

\* 소비지 매장 개설 : ('08) 10개소 → ('09) 30 → ('13) 130

## □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소비자 혼란방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를 간소화
  - (현행) :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 (개선) : ('07년부터) 유기/무농약/저농약, ('10년부터) 유기/무농약
- 친환경 인증농산물의 사후 관리강화 및 부정행위자 인증신청 제한
-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 현실화 및 인증비용 일부 지원('08)

## □ 친환경축산물 생산 비중을 '10년까지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1%로 확대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도입('07)
  - 저밀도 사육과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사육방법 중심으로 인증기준 마련
- 유기 배합사료 공정서·일반기준 마련('07)으로 유기사료 공급 확대 추진

## 다 자연순환농업 체제 구축(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촉진)

-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07년부터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 전량 육상처리 추진
  - \* ('06) 261만톤 → ('07) 220 → ('08) 170 → ('00) 70 → ('12) 0
- 2011년까지 가축분뇨처리사업비 집중 지원으로 자원화 촉진
  - \* ('06) 344억원 → ('07) 424억원 → ('08이후) 664억원 이상
  - \* 가축분뇨자원화율 : ('06) 82% → ('13) 90
-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에 중규모 양돈농가 등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 \* ('07 : 신규사업) 5개소 → ('08이후) 15개소 이상
- 경종·축산간 조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설치를 확대('07 : 59개소→ '08이후 연간 15개소 이상)
- 자연순환농업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및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평가 실시
  -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
  - 품질이 우수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매년 우수자원화시스템 평가 실시
  - \* '07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설치토록 지도

- 전문화된 퇴·액비 유통 우수조직을 중점 육성하고,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운영자금 지원
    - \* ('07 : 신규사업) 160억원 → ('08이후) 320억원 이상
    - \* 협약체결 조직 수 : ('06) 18개소 → ('07.7) 39 → ('10) 50
  - 퇴·액비 유통센터에 퇴액비 살포 시설·장비 및 살포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민간업체 참여 유도
  
- 가축분뇨를 사용하여 양질의 퇴·액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악취 없는 저농도 액비 출현 등을 고려, 질소함유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비료공정규격 개정('08년)
  - 국내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마련
    - 판정기준 마련 및 현장적용 시험('08년), 비료공정규격 반영('08년), 판정기술 보급('09년)
  
- 퇴·액비 수요처 확보를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추진 및 경종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을 2013년까지 8만ha로 확대
    - \* 청보리면적 : ('06) 9.7천ha → ('10) 50 → ('13) 80
  - 경종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퇴·액비 시범포 운영, 캠페인, 세미나 등 자연순환농업 홍보활동 전개

## (1) 산지유통의 효율화

### □ 규모화된 산지유통의 핵심주체 육성

- 안정된 판로, 규모화된 출하조직, 전문경영 등 혁신요소를 갖춘 공동마케팅조직을 집중 육성
  - \* 공동마케팅조직 : ('06) 15개소 → ('10) 41 → ('13) 80
  -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전문조직 중심으로 마케팅역량을 강화하여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산 농산물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상품으로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농협의 산지유통시스템 혁신
  -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규모화·전문화 추진
-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병 등 구조개선 추진
  - 일선조합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인센티브 자금 지원

### □ 규모화된 유통주체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우수 산지유통조직 중심으로 선별·포장 및 상품화 시설 지원
  -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시설(권역별 총 20~25 개소)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 촉진
-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경영개선 클리닉 지원으로 경영혁신 기반 구축

**쌀 : RPC에 버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

- RPC에 대한 매입자금('07 : 9,184억원) 지원을 통해 수확기 매입물량 확대
  -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차등 지원
- RPC 건조·저장시설을 확충('07 : 258억원)하여 고품질 쌀생산기반 조성
  - 2013년까지 RPC 건조·저장시설 1,30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유통량 대비 처리능력을 70% 수준까지 제고
- RPC의 매취방식을 수탁판매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탁 선도금 지원 확대
  - 농협 RPC 수탁 비율(물량) : ('06) 3%(19천톤) → ('13) 30%(216천톤)

**원예 : 채소·과실류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에 원료농산물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확대
- 경쟁력 있는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에 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
  - 산지유통센터(APC)중 경영 부진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클리닉」 실시하여 경영정상화 유도

**축산 : 시설과잉인 도축장의 구조조정 촉진**

- 도축장에 대한 HACCP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통해 우수한 도축장(LPC 등)에 지원 집중('07 : 637억원)
  - LPC 도축점유율(% , 돼지) : ('07) 22% → ('10) 27 → ('13) 30
- 도축장 2개소 이상 통폐합시 인센티브 자금 지원

## APC · RPC · LPC 중심 산지유통혁신 비전

(단위 : 개수, 천톤)

			'05	'10	'13
RPC	개소수	농 협	182	100	100
		민 간	120	110	100
		계	302	210	200
		건조·저장 시설수	689	1,419	2,099
		처리 비중	31%	53	70
APC	개소수	거점형	7	25	27
		일반형	225	273	288
		계	232	298	313
	처리량 (비중)	거점형	105 (1.6%)	375 (5.6)	425 (6.3)
		일 반	1,750 (26.0%)	2,178 (32.4)	2,935 (43.7)
		계	1,855 (27.6%)	2,553 (38.0)	3,360 (50.0)
LPC	개소수		7	7	7
	도축 점유율(돼지, %)		19	27	30

\* RPC 처리비중은 유통량대비 기준임(유통량은 생산량의 72.7%)

\* APC 는 주요 10대 원예농산물 생산량 6,720천톤('05기준) 대비 처리기준임

## [2] 소비지유통 활성화 및 물류 효율화

- 생산자 단체의 소비지 유통망을 확충,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 중앙회/도시조합의 농산물 전문판매시설 중대형 규모화
    - \* 소비지 유통시설/대형판매장 : ('06) 150/13개소 → ('10) 260/30 → ('13) 400/42
  - 소매유통망과 산지농협·농협유통간 협력체계 구축
    - 소매유통 점유비중 : ('06) 7.2% → ('10) 9.5 → ('13) 13.2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및 시설현대화 추진
  - 도매시장 법인의 인수·합병 촉진, 가격정보 등 법인의 공시 의무 강화, 도매시장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개선('07년)
  - 가락동 도매시장의 도·소매시설 현대화 및 물류시설 확충
- 감모비·운송비·하역비 등 소모성 물류비 절감 적극 추진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의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율을 '13년까지 80% 수준으로 제고
    - \* 표준규격출하율 : ('06) 69.3% → ('10) 77 → ('13) 80
  - 포장화율이 낮은 배추·무 포장유통을 전국 32개 공영도매 시장에서 전면 실시('07년)
  - 물류장비 구입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 하역 기계화 촉진
    - \* 농산물 하역기계화율 : ('06) 23.1% → ('13) : 50%
  - 예냉·저온저장 시설 확충과 저온 수송 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를 구축

### [3]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안정기능 강화

-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지지는 축소하여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산지유통주체 중심의 계약재배를 확대·내실화
  - 쌀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 정착 및 수급균형 추진
    - 공공비축제는 864천톤을 기준, 매년 432천톤 시가로 매입·방출('07~)
    -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수탁판매 활성화 등을 통해 시중 유통량 중 RPC매입비중을 50%까지 확대('13년까지)
  - 채소수급안정사업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07)
    - 사업주체를 농협중심에서 지방 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최소계약 면적 상향조정, 장기 계약농가 우대조치 등
    - 유통주체별로 지원되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품목별로 지원되는 채소·과실 계약재배·출하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09년까지)
- '13년까지 주요 원예품목(32개)에 대한 자조금단체 결성을 완료하고 이후부터는 정부 대응보조 비율 축소
  - 자조금 사업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화하고 거출시점에 관계없이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기금화 추진('07)
  - 중장기적으로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검토



□ 축산분야 자조금 관련 제도개선 및 자조금 조성 품목 확대 추진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자조금 대의원 수 조정, 수납기관(도축장 등)에 대한 수수료 조정 등
- 육계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08년)하고, 축산 자조금 조성 품목을 10개로 확대('13년)
- 축산 자조금 거출액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조금 정부보조기준(안) 마련('08년)
  - 정부보조 비율 단계적 감축 등 검토
- 현재 소비촉진 홍보 중심인 자조금 사업을 농가교육·정보제공 등을 강화하여 자율수급조절에도 활용하도록 유도(중장기)

□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농업관측 정보 제공 확대

- 관측대상품목은 생산액·농업인의 관심도 등을 고려, 연차적 확대
  - 관측품목수: ('06) 27개 → ('10) 32→ ('13) 39
-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수집하여 농업인들에게 연중 제공
  - 소비자패널 전용 인터넷 개설 및 관련자료 DB구축('07)
- 지리적 정보(GIS), 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농업관측 정보 제공
  - 추가 콘텐츠 : ('05)생산 및 기상, ('06)도매, ('07)수출입, ('08)산지

##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1)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의의

- 식량자급률은 국내 농업생산이 국민 식량소비에 대응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자급률=국내생산량/소비량)
- 목표치 설정을 통해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과 농정 가이드라인 제공
  - 소비자에게는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한 식량소비목표 제시
  - 생산자에게는 식량의 생산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는 국내 농업생산의 대응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 (2)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의 전제

- 2015년 추세전망치는 품목에 따라 '03~'05년까지의 자료를 기본으로 계량모형(KREI-ASMO, KREI-COMO 등)을 이용하여 추계
  - 계량적인 추세치와 바람직한 소비 수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한미FTA 체결 등 '03~'05년 이후의 상황 변화는 분석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음
- 쌀소득보전직불제, 보리수매제 등 주요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세치 및 목표치를 추정

### (3) 소비량 목표

□ 바람직한 권장열량 2,036kcal<sub>/1인·1일</sub> 설정(목표열량 소비량은 2,750kcal)

- 목표열량 소비량은 조리과정에서 손실 등을 감안, 권장열량 공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소비량을 의미

□ 목표열량 섭취를 위한 식품류별 열량 소비(공급)량 배분

- 에너지를 구성하는 단백질(Protein), 지방(Fat), 탄수화물(Carbohydrate)의 이상적인 구성비율은 각각 20%, 15%, 65%로 설정하고

\* P-F-C 구성비(2005년) : 단백질 15.4%, 지방 20.3%, 탄수화물 64.3%

- 식품류별·세부품목별로 목표열량소비량을 설정

<주요 식품류별 1인·1일당 권장 열량섭취량과 목표열량소비량>

(단위 : kcal)

분 류	'01년	'05년	'15년 권장열량 (구성비율)	'15년 목표 열량소비량
곡류·서류	1,138.0 (57.6%)	1,158.7 (57.5%)	1,083.2 (53.2%)	1,461.4
채소류·과실류	169.9 (8.6%)	202.1 (10.0%)	270.8 (13.3%)	365.9
육류·어패류 ·두류·난류	347.8 (17.6%)	358.4 (17.8%)	433.7 (21.3%)	585.1
우유·유제품	61.2 (3.1%)	72.2 (3.6%)	234.1 (11.5%)	317.0
기 타	258.9 (13.1%)	224.8 (11.1%)	14.3 (0.7%)	20.6
계	1,975.8 (100.0%)	2,016.2 (100.0%)	2,036.0 (100.0%)	2,750.0

\* 국민 전체적으로는 영양소(열량 포함) 섭취부족자가 과잉섭취자보다 많은  
상황으로 장기적인 권장열량섭취량은 현재보다 약간 증가할 필요

\* 섭취 부족자는 전국 평균 11.4%(여자 13.5%, 읍·면지역 11.8%), 과잉  
섭취자는 7.2%(남자 8.2%, 대도시 8.3%) 수준('05, 국민건강영양조사)

#### (4) 2015년 목표치 설정 내용

- 식량자급률은 (i)품목별 자급률 (ii)주식용 식량자급률, (iii)곡물자급률, (iv)칼로리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 ■ 품목별 자급률 ■

- ① 곡류(쌀·맥류) : 쌀은 90.0%, 맥류는 4.0%로 설정함

#### 쌀

#####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쌀	4,451	4,613	96.5	4,768	5,001	98.9

#####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쌀	4,156	4,020	96.7	4,020	4,446	90.0

- 1인당 소비량 목표는 전망추세 최대치(68kg)보다 높은 73kg으로 설정하여 소비량 감소 추세를 낮추려는 정책적 의지 반영

\* 1인당 쌀소비량 : '04) 82.0kg(1일 225g) → '06) 78.8(216) → '15 목표) 73( 200)

- 생산은 소비량 목표치를 감안하여 의무수입물량 이외에는 전량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805천ha, 4,020천톤)

\* 추세전망(850천ha, 4,156천톤) 생산시 연간 약 55만톤 재고부담 발생

\* 의무수입물량 : '04) 205천톤 → '06) 246 → '15) 409

## 맥류

###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맥류	190	2,492	7.6	154	2,387	6.5
보리	177	311	56.9	148	302	49.0
밀	13	2,181	0.6	6	2,085	0.3

###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맥류	107	2,474	4.3	<b>127</b>	<b>3,000</b>	<b>4.0</b>
보리	100	294	34.0	<b>92</b>	<b>294</b>	<b>31.0</b>
밀	7	2,180	0.3	<b>35</b>	<b>2,706</b>	<b>1.0</b>

- 보리는 순식용 연간소비량을 자급할 수 있는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사료용 청보리 생산으로 재배면적 감소를 대체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 증가('04. 34.1kg → '15. 37.5kg) 목표를 감안, 품질 개량과 유통개선을 통한 재배면적 증가('04. 4천ha → '15. 10천ha) 목표 설정

② 두류(콩) : 42.0%로 설정함(사료 제외 식용 자급률)

###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콩	105	421	25.0	183	454	40.2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콩	190	460	41.3	201	473	42.0

- 소비목표는 바람직한 식품섭취모형의 곡류 총열량공급 비중을 감안하여 증가 목표를 설정('03; 8.0kg → '15; 9.5kg)

\* 1인당 연간 소비량 : '03) 8.0kg → '04~'06) 9.2 → '15) 9.5

- 생산 목표는 콩은 두부·된장 등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재배면적 확대('04; 85천ha → '15; 115)를 반영

\* 논콩 증가에 따른 단수향상('02~'04 평균 145kg/10a → 175kg/10a)도 고려

③ 서류 : 99.0%로 설정함(사료용 수요 제외)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서류	988	918	107.6	982	997	98.5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서류	752	760	99.0	752	760	99.0

- 1인당 소비량 추세를 고려하여 소비량 목표 설정

\* 감자 소비량 감소('06. 12kg → '15. 9.5kg) 및 고구마 현행 수준('06. 4.8kg) 감안

- 사료용을 제외한 소비량의 대부분을 자급하는 수준으로 생산

④ 채소류 : 85.0%로 설정함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채소류	10,468	11,133	94.3	10,181	11,040	92.2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채소류	9,600	11,400	84.2	<b>9,809</b>	<b>11,443</b>	<b>85.0</b>

- 소비목표량은 국민영양을 고려한 바람직한 식생활 등을 감안하여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

\* 1인당 연간 소비량 : 04) 160.8kg → 15) 185.9kg(전망치) / 191.5kg(목표치)

- 생산량 목표치는 검역상 제한해제 가능성, 채소류의 낮은 관세 등으로 전망치가 감소하나 목표소비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⑤ 과일류 : 66.0%로 설정함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과일류	2,411	2,830	85.2	2,504	3,029	82.7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과일류	2,030	3,030	66.9	<b>2,050</b>	<b>3,091</b>	<b>66.0</b>

- 소비목표량은 국민영양을 고려한 바람직한 식생활 등을 감안하여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

\* 1인당 연간 소비량 : 04) 41.6kg → 15) 50.7kg(전망치) / 51.7kg(목표치)

- 생산량은 추세치 수준에서 생산유지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설정

⑥ 우유 및 유제품 : 65.0%로 설정함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우유 및 유제품	2,292	3,123	73.4	2,215	3,060	72.4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우유 및 유제품	2,342	3,750	62.5	<b>2,342</b>	<b>3,586</b>	<b>65.0</b>

- 바람직한 P-F-C 의 구성비율을 감안하고 시유 소비량의 장기적 정체 추세를 반영하여 '15년 목표소비량 설정

\* 1인당 연간 소비량 : 04) 63.9kg → 06) 63.6 → 15) 75.3(전망치) / 72.0(목표치)

- 생산량은 추세치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



㉚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 육류는 71.0%, 쇠고기는 46.0%, 돼지고기는 81.0%, 닭고기는 80.0%로 설정함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육류	1,182	1,517	77.9	1,156	1,594	73.0
쇠고기	145	328	44.2	158	330	47.8
돼지고기	749	871	86.0	677	875	77.4
닭고기	288	318	90.6	321	389	82.6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육류	1,422	2,030	70.0	<b>1,310</b>	<b>1,833</b>	<b>71.0</b>
쇠고기	232	520	44.6	<b>232</b>	<b>503</b>	<b>46.0</b>
돼지고기	840	1,020	82.4	<b>740</b>	<b>906</b>	<b>81.0</b>
닭고기	350	490	71.4	<b>338</b>	<b>423</b>	<b>80.0</b>

- 식생활 개선을 감안, 목표소비량을 전망보다 다소 낮게 설정
  - \* 쇠고기(1인당 연간) : '01~'04) 7.9kg → 15) 11.5(전망치) / 10.0(목표치)
  - \* 돼지고기(1인당 연간) : '01~'04) 17.3kg → 15) 20.4(전망치) / 18.2(목표치)
  - \* 닭고기(1인당 연간) : '01~'04) 7.5kg → 15) 9.6(전망치) / 8.5(목표치)
- 쇠고기는 생산량 추세치 수준의 목표치 설정
- 돼지고기 생산목표치는 분뇨 처리문제 등을 감안, 장기적으로 '04년도 생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
- 닭고기는 추세치 대비 낮은 소비량 목표치를 감안, 추세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생산목표 설정

⑧ 계란류 : 100.0%로 설정함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계란류	535	535	100.0	537	541	99.4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계란류	568	568	100	568	568	100.0

- 소비량 증가추세를 감안한 소비목표 설정

\* 1인당 연간 소비량 : 04) 8.9kg → 06) 9.4 → 15) 11.4

- 소비량 대비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목표 설정

⑨ 조사료 : 85.0%로 설정함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조사료 (사료작물)	3,393 (906)	4,084	83.1	3,465 (1,032)	4,222	82.1

##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조사료 (사료작물)	3,594 (1,100)	4,794	75.0	4,075 (1,595)	4,794	85.0

- 육류소비량 증가 및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로 조사료 및 배합 사료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 조사료 급여비율을 45%로 상향하고 사료작물 생산확대를 통해 조사료 자급률을 85.0%로 상향 설정

## ■ 주식용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54.0%로 설정 ■

###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계	4,640	7,105	65.3	4,922	7,388	66.6
쌀	4,451	4,613	96.5	4,768	5,001	98.9
맥류	190	2,492	7.6	154	2,387	6.5

### ○ 추세 전망 및 목표치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계	4,263	6,494	65.6	4,147	7,446	54.0
쌀	4,156	4,020	96.7	4,020	4,446	90.0
맥류	107	2,474	4.3	127	3,000	4.0

## 곡물자급률은 25.0%로 설정함

### ○ 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2004			2006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곡물	5,041	18,880	26.7	5,434	19,622	27.7

### ○ 추세 전망 및 목표치('15년)

(단위 : 천톤, %)

구분	2015년 추세 전망			2015년 목표치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곡물	4,755	19,041	25.0	4,650	18,844	25.0

## 칼로리자급률은 47.0%로 설정함

### ○ 칼로리자급률 : 국내산 공급칼로리 / 총공급칼로리

- '03) 45.6% → '04) 46.7 → '15목표) 47.0(1,293kcal/2,750kcal)

### ○ 식생활 개선을 통해 칼로리의 구성비율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칼로리 자급률 상승 목표

- 상대적으로 자급률 수준이 높은 채소·과일·두류 등의 섭취 비중을 높이고 자급률 수준이 낮고 건강에 좋지 않은 유지류 및 당류의 식품 섭취 비중을 낮춤

\* 채소·과일류 열량섭취량 : ('01) 169.9kcal → ('05) 202.1 → ('15 목표) 270.8

\* 기타 식품 열량섭취량 : ('01) 258.9kcal → ('05) 224.8 → ('15 목표) 14.3

## (5) 목표치의 점검·조정

### □ 연도별 식량자급률 및 추진상황 점검

- 전년도 식량자급률 달성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당해 년도의 정책 추진상황을 중앙농정심의위원회에 보고
- 점검·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가칭)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
  - 점검단은 소비자·생산자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농림부내 품목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추진반을 운영
  - 실무추진반은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점검단에 보고

### □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재점검 및 수정

- DDA/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목표치의 설정을 위해 5년마다 재점검
  - DDA 협상 타결 등 주요 변수 확정시 기간중에도 재점검
- '(가칭)식량자급률 점검단'을 중심으로 재점검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농정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목표치를 조정

## [6] 목표치 달성을 위한 대책

◇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달성을 위해 소비측면과 생산측면에서 균형적인 과제 도출과 시행

### 소비측면

#### □ 전통 식문화의 유지·계승을 위한 식생활 교육 강화

-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교육교재 개발·보급
-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문화 운동전개 및 교육기회·체험프로그램 확대

#### □ 다양한 식품 정보의 제공 및 식생활 지침·표준식단의 보급

- 계절별·연령별 맞춤형 표준식단 및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식품의 영양성분, 영양학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 강화 및 식품 성분표 등을 통한 식품 정보의 제공 확대

\* '식품산업진흥법('08.6월 시행예정)'에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식품성분 조사 등의 추진 근거 마련

####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및 홍보

- 원산지 표시를 가공·포장에서 음식점 단계까지 지속 확대
-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식품 규격·인증제도 확대

#### □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손쉬운 한식조리법 개발·보급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

## 생산측면

### 식량작물

- 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브랜드화 촉진 등으로 소비자가 만족할 수준의 품질고급화 대책 추진
  - 생산과 연계하여 다양한 쌀 가공제품 개발·보급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 및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추진
- 보리는 사료용 청보리 생산으로 전환하고, 식용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조정으로 과잉재고 해소
- 밀은 생산확대를 위해 품종개량과 수매자금 지원
- 규모화·기계화가 가능한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콩·감자등)”를 육성하고, 계약재배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공급 추진

### 조사료

- 조사료는 자급사료가 경쟁력이 있어 생산 확대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사료작물 재배육성 및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 청보리 종자정선시설 설치, 청보리 생산조합 자금 지원 등 조사료 생산·이용 선도조직 육성·관리
  - 수확기가 다양한 사료작물을 개발·보급하고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단” 설치·운영

## 채소·과실

- 원예산업은 수급안정과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추진
  - 채소는 품목별 자조금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 등으로 수급 안정
  - 시설원예 현대화·규모화 지원, 키낮은 사과원, 비가림 시설 등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생산단지 육성
  - 브랜드 육성 및 고품질 원예 생산·유통 기반 구축
  - 과실 주산지를 중심으로 APC(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생산·유통 관리체계 확립

## 축산물

-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생산성 증대, 유통 차별화 등을 통해 국내산 육류의 시장 점유율 극대화
  - 쇠고기는 우수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품질화 및 브랜드육 타운 조성 등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 유도
  - 돼지고기는 가축개량,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브랜드 육성을 통한 품질고급화, 분뇨자원화로 친환경 양돈산업 기반 조성
  - 닭고기는 계열화 중심의 브랜드화 및 등급제 실시로 품질고급화 추진
- 우유는 유제품개발, 학교급식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낙농산업 유지
- 계란은 브랜드 육성 및 등급관정을 통한 품질고급화 및 질병 예방 등을 통해 생산기반 유지



< 첨부 >

## 식량자급률 목표치(2015년)

(단위: %)

품 목	2003	2004	2015
쌀 (A)	97.4	96.5	90.0
맥류 (B)	7.0	7.6	4.0
주식용 자급률 (C)=A+B	68.2	65.3	54.0
두류(콩) (D)	29.0	25.0	42.0
서 류 (E)	109.1	107.6	99.0
곡물자급률 (F)=C+D+E+ 사료곡물	27.8	26.8	25.0
조사료자급률	84.0	83.1	85.0
채소류	94.6	94.3	85.0
과일류	85.0	85.2	66.0
우유 및 유제품	80.0	73.0	65.0
육 류	70.8	79.3	71.0
쇠고기	36.3	44.2	46.0
돼지고기	93.0	86.9	81.0
닭고기	76.3	90.0	80.0
계란류	100.0	100.0	100.0
칼로리 자급률*	45.6	46.7	47.0

\* 칼로리 자급률은 수산물까지 포함한 개념임

## 가 식품산업과 농업간 연계강화 및 관련인프라 구축

###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를 통해 균형성장 도모

#### ○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시설 확대

- 가정·식당·외식업체·식품업체 등 수요처별 차별화된 공급체계 구축
- 생산자와 수요처간 계약생산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 \* 전처리업체·외식업체 원료수매자금 지원 확대('07, 50억원)

#### ○ 산지와 식품·외식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여 유통비용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확대 도모

#### ○ 기 육성된 산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영활성화 유도

- 자체 기술개발·경영능력을 배양토록 기술개발·위생시설 확충 지원 및 조직화·공동 브랜드화 등을 유도

####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대표식품 발굴·육성

- 순창고추장, 임실치즈, 진도홍주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표 식품명품의 개발 활성화 유도
- \* 지역농업클러스터·지역특화사업 등에 명품식품 육성이 포함되도록 유도

-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광역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현행 시·군 중심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별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
  
- 식품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관련통계를 확충하고 기술개발 확대
  - 원료농산물의 수급에서 식품의 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식품경제(Food system)상의 통계체계 정비 및 관련정보 D/B화
    - '07년 식품산업 현황조사 체제 구축, 이후 연차적으로 조사대상 확대
  -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지원확대
    - \* 농림기술개발 사업의 식품가공연구를 확대하여 '11년까지 200과제 400억원 지원('94~'06간 564과제 730억원 지원)
  
- 농식품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식품제조·외식·식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계 정비, 수출 지원 등의 근거 마련
  -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식품 규격·인증제도 확대
    - 가공식품·전통식품의 규격 제·개정 및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 도입
    - 지리적 표시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식품관련 전시회에 전시홍보관 운영 등 추진

## 나 전통식품 산업화 및 세계화

- 전통식품명인, 우수업체 육성 등 전통식품의 산업화 유도
  - 전통식품 명인제도는 일반식품까지 포괄하는 식품명인 제도로 개편하고 소비자 홍보 강화
  - 평가 등을 통해 우수업체 위주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집중 지원
  -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통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전통음식을 산업화·브랜드화하여 해외진출 기반 조성
  -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거점별 식문화 홍보 등 추진하여 우리 식문화 해외 진출 도모
  - 전통음식 조리법을 표준화('08까지)하고, 새로운 메뉴·조리법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연구, 인력 육성 및 경영지원
  - 인삼·고추장·된장 등의 Codex 규격화 추진(김치는 '01년 완료)
-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 산업화 지원
  - 전통주 제조 실태(종류, 업체 등)를 조사하고 전통적인 제조법 등 복원
    - 전통주를 테마로 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촉진
  - 전통주 생산자단체 육성, 제조·판매 규제완화로 발전토대 마련

## 다 올바른 농식품 소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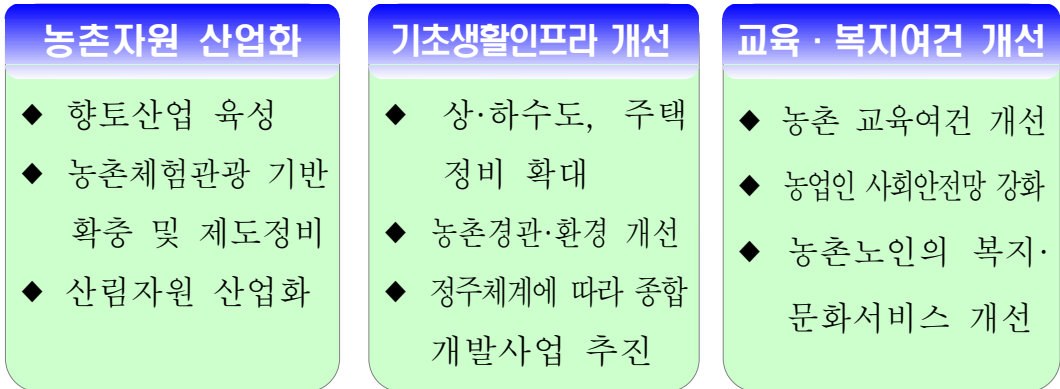
- 안전성, 품질, 영양, 유통경로 등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다양한 정보를 D/B화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
-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과학적 기반확립 및 연구 강화
  - 우리 농식품, 전통식품 등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 강화
    -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의 영양생리효과 입증 연구
  - 기능성 농산물의 효능에 대한 연구 강화
  - 영양 관련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식품의 생산·공급,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식생활 지침(표준식단)을 개발·보급하여 건강한 식생활 유도
  - 국산 농산물과 전통음식을 활용한 식단 및 식생활 지침 개발
    -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생활지침 활용 방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올바른 식문화 운동 등을 전개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실시(교육부 공동)

### Ⅲ. 농촌 정책

목 표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 구현

정 책



로드맵

구 분	<2007>	<2008~10>	<2011~13>
<b>농촌자원 산업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산업 육성 시범사업 추진 (19개)</li> <li>○ 도농교류촉진법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활 력 사 업 , 향토산업육성 사업 등을 농촌 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 테마 공원 24개소('11)</li> <li>○ 농촌체험마을 685개소('13)</li> </ul>
<b>생활인프라 및 경관·환경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개발 사업 체계화</li> <li>○ 농촌주택개선 용자 확대</li> <li>* '07 : 5,660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경관개선 사업 확대('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13)</li> </ul>
<b>교육·복지 여건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 보장 제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보험료 지원 등급 상향('09) (16등급 → 18)</li> <li>○ 농촌노인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율 100%('13)</li> </ul>

# 1 농촌자원 산업화

## 가 향토산업 육성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추진
  - 기발굴한 19개 자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07)하고 '08년부터 향토자원 육성사업 본격 추진('09년 79개→'13년 200)
    - 자원 개발을 위한 컨설팅, 브랜드화 등을 1~3년간 포괄적으로 지원
      - \* 지자체(향토자원 발굴)와 중앙정부(컨설팅) 역할 분담
  - 산업화 촉진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역특화사업과 연계, 제도개선 추진('07)
    - 매년 지자체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추진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 농외소득원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추진
  - 농공단지의 신규조성은 현재 조성('06 : 322개소)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
    - \* 농공단지 조성 : ('06) 322개소 → ('10) 364 → ('13) 400
  -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시·군 농공단지 조성면적 확대 : (당초) 133m<sup>2</sup> → (개선)166

□ 낙후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인구, 소득, 재정력 등 낙후도를 기준으로 **낙후지역 선정 지원**
  - 1차 지정 지역(70개 시군, '04년)은 3년간(최대 9년) 지원하며,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재선정
  - 2차 **낙후지역을 선정('07: 70개 시군)하여 신활력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중앙정부는 사업계획, 실적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지역간 경쟁 유도
- 지자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 아래 지역혁신 선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 추진
  - S/W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에 역점

□ 신활력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농촌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마련('07)**

- 관련 사업중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연관사업은 패키지화
  -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
-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하는 농촌활력 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 다 농촌관광 등 도농 교류 활성화

### □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녹색농촌체험마을 확대 조성 : ('07) 84 → ('13) 685
-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확대('07 : 4개 → '11 : 24)하여 지역별 농촌관광의 거점 형성

### □ 농촌주민의 농촌관광 추진역량을 강화

-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촌 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채용 지원
  - \* 마을사무장 지원('07) : 150개마을, 월 100만원/1인당(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체험마을 단위로 1인1촌 전문가 자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촌 체험관광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 1인1촌 전문가 지원마을 : ('05) 40개 마을 → ('07) 50 → ('13) 50

### □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관심 증대 유도

- 농산어촌체험박람회 개최(격년), 여름휴가를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 전개 및 농산어촌체험지도 제작·배포
- 1사1촌 운동은 현재와 같이 민간중심으로 발전 유도

###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07년)

- 농촌체험마을의 공동숙박, 음식제공·판매 관련 특례
-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및 도시민 현장체험 근거, 농촌체험 지도사, 농촌마을 해설가 선발·활용 규정 등

## 라 산림자원의 산업화 추진

### □ 임산물 클러스터 등 산촌 소득원 확대 지원

- 산촌지역에 맞는 청정임산물 클러스터 구축
  - 지역의 특산물을 2차·3차 산업과 연계하여 산촌산업 다각화
- 청정임산물 생산과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 유도
-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시설정비 및 확충
  - 산악레포츠, 테마숲, 생태관찰 탐방로 등 시설기반 확충
-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테마 발굴
  -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다양한 산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 □ 산림휴양 시설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야외 휴양수요에 대처

- 권역별 휴양수요에 맞추어 신규 조성하고 기존시설은 보완
  - \* 휴양림조성 : ('05까지) 107개소 → ('10까지) 160 → ('13까지) 175
  - \* 시설보완 : ('05까지) 44개소 → ('10까지) 50 → ('13까지) 60
- 산악, 해안, 승마, 산림문화체험 등 다양한 전문 휴양림 조성
  - \* 전문휴양림조성 : ('05까지) 2개소 → ('10까지) 12 → ('13까지) 13
- 도시근교 등에 당일형 가족 휴식공간, 산림욕장 및 피크닉공원, 종합적인 산림휴양문화단지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 하이킹 도로,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다목적 잔디광장 등 산림 휴양활동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 도입
  - \* 산림욕장조성 : ('05까지) 101개소 → ('10까지) 115 → ('13까지) 122

## 2

## 생활인프라 및 경관·환경 개선

### 가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상·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깨끗한 식수의 안정적 공급
  - 면단위 상수도 설치를 확대,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 ('05) 37.7% → ('10) 64 → ('13) 75
  -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농촌의 소규모 자연마을(20호이상)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 14년까지 불안전한 우물 등을 사용하는 소규모 농촌마을에 지하암반수를 공급 : ('07년 까지) 5,616개소 → ('14) 7,751개소
  -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확대 : ('05) 106개소 → ('09) 394개소
- 농촌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 \* 농어촌도로 정비 : ('05) 18,618km(포장율 : 30.2%) → ('13) 19,270km(31.2%)
- 과학·문화·예술·체육 시설 및 서비스 확충
  -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센터, 평생교육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건립 : ('05) 210관 → ('13) 260
  - 중심지역에 체육·문화 시설을 갖춘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간이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구비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 나 농촌주택 정비 지원 확대

### □ 농촌주택정비 융자금(신축, 보수) 금리인하 및 융자지원 확대

- 현행 융자금 금리(3~4%)를 3% 수준으로 인하
- 민박 등으로 이용되는 농촌주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규모 제한 완화(현행 : 100m<sup>2</sup> → 개선 : 150m<sup>2</sup>)
-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 개량 수요에 적극 대응
  - \* 주택개량(누계) : ('07) 5,660호 → ('10) 18,000 → ('13) 22,000

### □ 마을재개발 등 집단적인 농촌주택 개량 촉진

- 주택개량 융자금을 전원마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지원
- 농촌주택조합 제도를 통한 공동 재개발방식 도입 검토

### □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농촌주택여건 개선

- 민간단체가 농촌지역 주택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를 촉진
- 자원봉사자가 농촌주택개선 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매뉴얼 마련 등 프로그램 개발

### □ 거주자의 사용 편의를 고려하고 경관개념을 연계한 다양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모델 연구 및 보급 사업도 추진

## 다 농업·농촌 정보화

- 농업·농촌 정보화를 촉진하고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농촌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
  - 중장기 계획은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추진
    - \* 컴퓨터 보급률(04) : 농가 35%, 전국평균 78 / 컴퓨터보유자 인터넷이용율(05) : 농가 28%, 전국평균 76
  
- 지능기반의 농업·농촌 정보화 인프라 확충
  - 농촌주민의 정보 접근권 개선을 위해 초고속망 구축 완료(07)
  -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 교육(매년 55천명)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 생산·경영·유통 혁신
  -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농산물 RFID 수요산정, 표준코드 설계 등을 통해 농산물 품질인증, 이력추적 등에 활용
  - 농산물 전자상거래(e-Business) 지원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시설하우스 자동원격제어 등 정밀농업의 실현을 위한 기술 지원
  
- 첨단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기술의 융합으로 정보화 농촌 건설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반의 미래 정보화 농촌 시범단지(u-village) 구축사업 추진('10~'11)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재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u-농림관제센터 건설 추진('09~'11)

## 라 쾌적한 농촌공간 구현

### (1) 농촌 환경 보전

- 토양종합관리를 통해 토양의 산성화 및 오염 방지 적극 추진
  -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오염실태를 조사, 중금속 오염 농지에 대해서는 객토 또는 휴경조치하고 농산물은 전량 폐기
  - 토양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및 푸른들 가꾸기 지속 추진
    -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08)하고 전량 입상화 추진('13)
    - 푸른들 가꾸기는 겨울철 노는 땅중 20%인 280천ha로 확대
  - '05년 폐지된 화학비료 보조에 상응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 \* 유기질비료 지원(공급) : ('06) 120만톤 → ('08) 180 → ('13) 300
-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기준초과 저수지는 관계부처와 협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
  - 규모가 큰 저수지의 수질오염 변화추이 분석 등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492개소에 대해 수질측정망 운용
    - \* 2년마다 농업용저수지 18천개소 수질 일제조사 실시
  - 최근 5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69개 저수지는 수질개선대책 추진
    - 수질개선이 시급한 47개소는 우선적으로 상류 및 호소내 대책 병행 추진
      - \* 상류지역은 환경부, 호소내 지역은 농림부 주관
    - 나머지 22개소는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상류유역 오염저감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호소내 대책은 이후 추진
  - 유역내 수질오염 발생원에 대한 단속강화 및 교육·홍보 실시

## [2] 농촌경관 개선

- 농촌주민들의 자발적인 농촌경관 보전·형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촌경관개선 정책사업 확대
  - 진입로·마을안길·공터 등을 활용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09)
  - 농촌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자원의 유지·보전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메뉴사업 발굴
    - \* 농촌주택, 담장 등 취락지경관, 가로경관, 전통문화공간 발굴·보전 등
  - 주변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 기준 제정 추진('08)
- 산림경관은 경관림, 마을숲, 산지경관으로 구분·관리
  - 경관림 : 수목 등 생태계 중심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관 관리
  - 마을숲 : 전통마을숲의 복원·정비와 생활권 마을숲의 조성·관리
  - 산지경관 : 지형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산지경관 관리
- 농촌지역개발사업을 경관계획 수립 후 시행하도록 '先농촌경관 계획-後사업시행' 체계 구축
  - 농촌경관지표, 농촌경관맵 및 농촌경관보전협약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 및 시범적용
  -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농촌경관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

## 마 도시민 농촌유치

- 도시민의 농촌정주공간 마련을 위해 전원마을조성 지원 확대
  - '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 지원하되, 도시민 이주수요에 맞춰 사업물량 추가 확대
    - \* 조성마을(신규착수 누계기준) : ('06)55개소 → ('10)170 → ('13)300
  -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07)
    - 관련 법령 인·허가절차 간소화,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 주택건축 담보 대책
    - 기존마을 재개발 및 지방이전기업 임직원용 전원마을 조성 지원 등
  - 전원마을 조성사업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발간, 홍보 강화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 도시민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도시민 유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
    - 도시민 유치 홍보, 전문가 컨설팅비 등 보조
- 전원생활 맞춤형 정보제공 및 귀촌에 대한 사회적 붐 조성
  - 농어촌종합정보포털([www.nongchon.or.kr](http://www.nongchon.or.kr))을 개선,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안내·상담을 지속 실시
  - 전원생활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정부정책·전원마을 소개, 전원생활 체험기회 제공 등으로 귀촌 분위기 조성



## 바 체계적인 농촌지역 개발

- 면소재지 개발, 배후중심마을 조성 및 면 지역의 기초생활 환경 정비 등 지속 추진
  - 면소재지 개발은 '17년까지 200개소 수준을 선정하여 지원
    - 중심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존시설 현대화, 시가지 정비 등
    - '07년도 4개소 기본계획수립, '08~'10 시범사업 추진
  - 배후 중심마을 조성은 지역 자원개발, 소득화사업, 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권역 특성 및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
    - \* 농촌마을종합개발 : ('07)96개 권역 → ('10)256 → ('13)496
    - \* 산촌생태마을조성 : ('07) 33마을 → ('10) 32마을 → ('13) 32마을
  - 모든 농촌지역의 정주 및 생활기본수요(National Minimum) 충족을 위해 면단위 기초생활환경을 정비 지속
-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정비 하고 시·군의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
  - 행자부로부터 농림부로 이관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을 '08년부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
    - 지원조건 : 2~5년간 30억원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삶의질 및 지역개발특별법에 의한 시군단위 지역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 삶의질 평가점검단 위원 증원 및 지자체 사업 등 평가 강화

## 가 농촌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50%) 지원 지속 및 제도 개선

- 재산, 농업외소득 정도 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낮추거나 지원을 배제하여 형평성 제고('07)

## □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추진

- 연금보험료의 지원 기준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을 현행 13등급에서 '09년까지 18등급으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원액 : ('06)119~259천원 → ('09)119~394 → ('13)119~572

## □ 농업인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강화

-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수준 향상 등을 통해 가입률 확대

- 사망시 지급액 확대('06 : 25백만원 → '10 : 60), 휴업급여(3만원/일) 신설 등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확대 : ('06) 46% → ('09) 66 → ('13) 100

- 농업인 재해보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10년이후)

- 재해유형, 질병유형 등 관련 기초통계 축적 및 연구 추진

- 농업인 직업성 질병의 감소를 위한 예방·재활관련 사업 병행추진

## □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 평가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

## 나 취약농가 지원 확대

### □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06년 82개 시·군 시범 실시후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07년)
- 농업인이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발생시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 ('06) 65세미만, 3ha미만(4천명) → ('07이후) 69세이하, 5ha 미만
- 65세이상 고령·취약농가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하여 가사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지원
  - ('06) 65세이상 단독·편조손 농가 → ('07이후) 65세이상 고령 취약가구
- 교육·질병·휴가시에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농촌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복지기반 구축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로 구성된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 ('06) 90개소 → ('09) 146 → ('13) 146
- 농산어촌 지역내에 건강장수마을을 조성하고 노인에 맞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건강장수마을 조성 : ('06) 300개 마을 → ('09) 800 → ('13) 800
- 복합노인주거단지('05 : 4개소 조성)는 운영 평가후 단계적으로 확대

## 다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영유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액 : ('04~'06)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 ('07~'08) 70 → ('09이후)75

#### ○ 보육시설 등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

\* 지원액 : ('06)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25% → ('07~'08) 35 → ('09이후) 50

####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

\*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 ('06) 260개소 → ('09) 361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 ('05) : 1,420개 읍·면중 476개(34%)

#### ○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충토록 지자체와 협조

-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 설치계획 : ('06)50개소 → ('09이후)163

#### ○ '출산농가도우미' 지원 확대토록 지자체와 협조

- 지원기간 : ('06) 30~60일 → ('07) 30~75 → ('08이후) 90

### □ 증가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 ○ 집합교육 형태의 적응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교육도우미 제도 운영

- ('07) 30개 시군여성 → ('08) 한국어 방문교육 여성가족부로 통합·조정

#### ○ 다문화 이해, 갈등해소 등 국제결혼 가족의 통합 지원

-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 모국방문 및 선진 농업현장 견학 추진

## 라 농촌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 응급 의료기관·보건소 등 공공 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
  - 농촌의 취약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취약지 지역응급 의료센터 추가지정, 응급시설 및 운영비 지원 등
  -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기능보강과 서비스 확충
    - 보건소, 보건지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체계, 이용 상황 및 노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신·증축 추진
    - \* 노후보건소, 보건지소 등 신·개축 : ('06)1,217개소 → ('09)1,459 → ('13)2,190
  
-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
  - '07년까지 1,342개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농작업 재해 원인 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방안 개발
  - 농작업 보호 및 안전보조 장비 개발 : ('04) 18종 → ('14) 80종
    - \* 농기계 사고율 : ('01) 7.7% → ('09) 3%, 농약 중독율 : ('01) 7.1% → ('09) 3%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Safe Farm Zone) 추진
  - '05년에 농업인, 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한 후 '06년부터 시범 실시
    - '06년에 9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09년까지 165개소 조성

## 마 농촌교육여건 개선

- 농촌지역 우수고교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1군에 1우수고교(88개 고교)를 선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모델 정착
    - \* 우수고교 육성 : ('04) 7개교 → ('06) 44 → ('07이후) 88
  - 농촌 지역의 실업계 고교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학자금·급식비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
    - \* 지원인원 : ('06) 25천명 → ('09) 28 → ('13) 32
  - 전국의 자영농과계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
    - \* 지원단가('06) : 3,090원/일, 1인당 연간지원일수 260일
    - \* 지원대상 : ('06) 2,422명 → ('09) 2,600 → ('13) 2,800
  - 농촌출신대학생의 하숙·자치비 등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및 각도에 「농촌대학생 기숙사」 건립(총 10개)
  
-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
  - 교육감 추천 신·편입학제 확대, 순회교사 수당 확대를 통해 농산어촌학교 우수교원 확보
  - 소규모 학교 도서관 지원 및 인터넷 통신회선 고속화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제3편

# 투융자 계획 조정

# I. 조정 개요

◇ 그동안의 투융자실적을 기초로 향후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한미FTA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원을 반영

□ 한미FTA 대책사업의 소요를 반영 '08~'13간 전체 투융자는 79.7조원에서 81.7조원(2.0조원 증)으로 조정

○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는 4.0조원 증액된 40.7조원으로 조정

- 고품농 경영이양 촉진(1,027억원 증), 축사시설 등 시설·장비현대화(21,015), 생산기반정비 분야(15,462) 지원 확대
- 영농규모화(△10,267)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농지매입지원 등을 축소 조정

○ 소득·경영안정분야는 4.4조원 감소한 19.5조원으로 조정

- 당초 과다 책정된 쌀소득(△14,359억원)·조건불리(△7,864) 직불과 도입이 지연된 농가단위소득직불(△3,160) 등 직불사업 축소

○ 농식품안전·유통혁신분야는 2.2조원 증액된 8.3조원으로 조정

- 농식품 안전관리 분야(8,027억원 증), 친환경·고품질 농식품 공급 분야(1,035) 등 소비자·건강 관련 분야 증액

○ 복지·지역개발분야는 0.2조원 증액된 13.1조원으로 조정

- 교육분야는 축소(△16,887억원)되는 반면, 타부처 사업 이관 등으로 기초생활환경정비(15,556억원 증)와 농촌자원 산업화(13,204)는 증액

□ '04~'13간 총 투융자계획은 '04~'07간 초과 투융자금액(1.9조원)을 포함하여,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3.9조원 증액 모습

\* '04~'07기간 예산기준 적용, '08년은 예산확보(안) 기준



#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04~'07			'08~'13			'04~'13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b>합계</b>	<b>395,934</b>	<b>415,112</b>	<b>19,178</b>	<b>796,969</b>	<b>816,980</b>	<b>20,011</b>	<b>1,192,903</b>	<b>1,232,092</b>	<b>39,189</b>
<b>1. 농업경쟁력 강화</b>	<b>203,479</b>	<b>225,231</b>	<b>21,752</b>	<b>367,207</b>	<b>407,140</b>	<b>39,933</b>	<b>570,686</b>	<b>632,371</b>	<b>61,685</b>
1) 맞춤형 농정 추진시스템	390	273	△117	0	440	440	390	713	323
2) 고품농 경영이양촉진	2,500	715	△1,785	8,767	9,794	1,027	11,267	10,509	△758
3) 농업인 교육훈련	1,473	1,485	12	2,121	3,807	1,686	3,594	5,292	1,698
4) 영농규모화 사업	16,044	16,798	754	36,632	26,365	△10,267	52,676	43,163	△9,513
5)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67,354	78,711	11,357	141,118	162,133	21,015	208,472	240,844	32,372
6) 생산기반정비	71,362	79,206	7,844	87,295	102,757	15,462	158,657	181,963	23,306
7) 수출확대 지원	2,225	1,679	△546	4,941	6,377	1,436	7,166	8,056	890
8) 성장동력확충	17,759	16,750	△1,009	41,103	37,893	△3,210	58,862	54,643	△4,219
9) 산림자원 육성	24,372	29,614	5,242	45,230	57,574	12,344	69,602	87,188	17,586
<b>2. 경영 및 소득안정 부문</b>	<b>100,110</b>	<b>103,727</b>	<b>3,617</b>	<b>239,333</b>	<b>195,474</b>	<b>△43,859</b>	<b>339,443</b>	<b>299,201</b>	<b>△40,242</b>
1)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37,554	46,508	8,954	128,953	103,685	△25,268	166,507	150,193	△16,314
2) 수급 및 가격안정	15,779	10,547	△5,232	22,974	16,389	△6,585	38,753	26,936	△11,817
3) 경영안정강화	40,550	43,309	2,759	73,053	58,286	△14,767	113,603	101,595	△12,008
4) 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	3,605	1,291	△2,314	13,324	5,914	△7,410	16,929	7,205	△9,724
5) 수입피해보전(폐업포함)	2,622	2,072	-550	1,029	11,200	10,171	3,651	13,272	9,621
<b>3. 농식품안전 및 유통혁신</b>	<b>41,752</b>	<b>36,518</b>	<b>△5,234</b>	<b>61,450</b>	<b>82,977</b>	<b>21,527</b>	<b>103,202</b>	<b>119,495</b>	<b>16,203</b>
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3,249	5,553	2,304	5,502	13,529	8,027	8,751	19,082	10,331
2) 친환경·고품질 농식품	7,130	5,498	△1,632	14,669	15,704	1,035	21,799	21,202	△597
3) 농식품 유통혁신	29,742	24,884	△4,858	37,198	50,552	13,354	66,940	75,436	8,496
4)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317	125	△192	771	1,885	1,114	1,088	2,010	922
5)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1,314	458	△856	3,310	1,307	△2,003	4,624	1,765	△2,859
<b>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b>	<b>50,593</b>	<b>49,636</b>	<b>△957</b>	<b>128,979</b>	<b>131,389</b>	<b>2,410</b>	<b>179,572</b>	<b>181,025</b>	<b>1,453</b>
1) 복지여건 개선	13,849	11,966	△1,883	32,983	28,811	△4,172	46,832	40,777	△6,055
2) 교육여건 개선	5,695	2,724	△2,971	21,758	4,871	△16,887	27,453	7,595	△19,858
3) 농촌 기초생활환경	10,661	18,987	8,326	11,026	26,582	15,556	21,687	45,569	23,882
4) 면·마을단위 종합개발	14,960	9,212	△5,748	46,960	41,669	△5,291	61,920	50,881	△11,039
5) 농촌자원 산업화	5,428	6,747	1,319	16,252	29,456	13,204	21,680	36,203	14,523

## II. 주요부문별 조정 내용('08~'13)

### 1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04~'07			'08~'13			'04~'13		
	계획	예산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계	203,479	225,231	21,752	367,207	407,140	39,933	570,686	623,371	61,685
1. 맞춤형 농정 추진시스템	390	273	△117	0	440	440	390	713	323
2. 고령농 경영이양촉진	2,500	715	△1,785	8,767	9,794	1,027	11,267	10,509	△758
3. 농업인 교육훈련	1,473	1,485	12	2,121	3,807	1,686	3,594	5,292	1,698
4. 영농규모화 사업	16,044	16,798	754	36,632	26,365	△10,267	52,676	43,163	△9,513
5.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67,354	78,711	11,357	141,118	162,133	21,015	208,472	240,844	32,372
6. 생산기반정비	71,362	79,206	7,844	87,295	102,757	15,462	158,657	181,963	23,306
7. 수출확대 지원	2,225	1,679	△546	4,941	6,377	1,436	7,166	8,056	890
8. 성장동력확충	17,759	16,750	△1,009	41,103	37,893	△3,210	58,862	54,643	△4,219
9. 산림자원 육성	24,372	29,614	5,242	45,230	57,574	12,344	69,602	87,188	17,586

- 맞춤형 농정 추진의 기초가 되는 농가등록제 추진('08 이후)
- 고령농 경영이양촉진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대폭 확충
  - '08~'13년간 10만명 수준(10만ha) 경영이양 목표
- 주업농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확대
  - 다만, 영농규모화 사업은 정부정책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활성화에 중점을 둠에 따라, 농지매입 용자지원 등을 축소
- 생산기반정비는 현실여건을 감안, '08~'13년간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수준 증액

<참고>

##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 투융자 조정 개요('08~'13)

① 맞춤형 농정시스템 구축 : 0억원 → 440, (440억원 증액)

○ 농가등록제 실시('08 이후)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② 고품농 경영이양 촉진 : 8,767억원 → 9,794, (1,027억원 증액)

○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추진('08~'13년간 10만ha 경영이양 목표)

③ 농업인 교육훈련 : 2,121억원 → 3,807, (1,686억원 증액)

○ 농업경영 컨설팅(68억원 증액), 교육훈련(1,032) 등 농업인 (관련종사자)들에게 경영·회계, 정보화,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민간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 확대

④ 영농규모화 : 36,632억원 → 26,365, (10,267억원 축소)

○ 확대 : 과원영농규모화 사업(1,090억원 증액)

- 과수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10년→'13)

○ 축소 : 영농규모화(농지매입 및 장기임대차 지원) 사업 (△11,345억원)

- 그 동안 정부에서 농지매입자금 또는 장기 임대차 선급금을 융자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시장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가 활성화되도록 유도

⑤ 시설장비 현대화 : 141,118억원 → 162,133(21,015억원 증액)

○ 확대 : 농기계 임대(898억원 증액), 축사시설 현대화(8,379), 분뇨처리(1,965), 원예브랜드(663), 동절기수급안정(1,119) 등

-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확대 추진

- 한미FTA 대응, 축산·원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분뇨처리시설 설치 확대
- 동절기 폭설 등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시설개보수(보강) 자금 지원 확대

- 축소 : 농기계구입자금(△4,150억원), 지역농업클러스터(△24,586) 등
  - 농기계 공동이용 등에 따른 농기계 구입자금 수요 감소
  - 클러스터 사업내용을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네트워킹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중심으로 전환, 투융자 규모 축소

**⑥ 생산기반 정비 : 87,295억원 → 102,757 (15,462억원 증액)**

- 확대 : 받기반정비(1,527억원 증액), 배수개선(4,272), 수리시설 개보수(4,300),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2,865) 등
  - 농업생산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밭농업의 기반시설정비를 확대하고 재해대비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확대
- 축소 : 대·중규모 용수개발(△5,310억원), 저수지 준설(△600) 등 신규지구 착수는 최대한 억제

**⑦ 수출확대 지원 : 4,941억원 → 6,377 (1,436억원 증액)**

- 한미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
  - 해외시장개척(180억원 증액), 농축산물 판매촉진(115), 시설원예 품질 개선(2,107, 신규) 등

**⑧ 성장동력 확충 : 41,103억원 → 37,893 (3,210억원 축소)**

- 종자·종축산업 육성을 위한 투융자 확대
  - 종자산업육성(586억원 증액), 가축개량(468), 유전자 보전(251) 등
- 생산기술관련 R&D는 당초 계획수립시 의욕적으로 투융자 규모를 산정하였던 부분을 현실화하여 축소 편성

## 2

## 소득 및 경영안정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04~'07			'08~'13			'04~'13		
	계획	예산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계	100,110	103,727	3,617	239,333	195,474	△43,859	339,443	299,201	△40,242
1. 주업농 소득안정	37,554	46,508	8,954	128,953	103,685	△25,268	166,507	150,193	△16,314
○ 농가단위소득직불	2,060	-	△2,060	12,360	9,200	△3,160	14,420	9,200	△5,220
○ 쌀소득직불(고정+변동)	33,175	45,921	12,746	106,281	91,922	△14,359	139,456	137,843	△1,613
2. 수급 및 가격안정	15,779	10,547	△5,232	22,974	16,389	△6,585	38,753	26,936	△11,817
3. 경영안정강화	40,550	43,309	2,759	73,053	58,286	△14,767	113,603	101,595	△12,008
○ 농작물재해보험	2,144	2,518	374	6,948	7,850	902	9,092	9,958	866
○ 농지매입사업(경영희생)	2,000	988	△1,012	33,000	14,400	△18,600	35,000	15,388	△19,612
4. 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	3,605	1,291	△2,314	13,324	5,914	△7,410	16,929	7,205	△9,724
○ 조건불리지역 지원	3,560	1,269	△2,291	13,104	5,240	△7,864	16,664	6,509	△10,155
○ 경관보전직불	45	22	△23	220	674	454	265	696	431
5. 수입피해보전	2,622	2,072	△550	1,029	11,200	10,171	3,651	13,272	9,621

□ 주업농 소득안정 지원부분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도입 지연(당초 '07년), 쌀소득직불금 지원액 감소 등으로 축소 조정

□ 경영안정지원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확충('11년 30품목)

○ 경영희생 농지매입지원은 당초계획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축소

□ 경관보전 직불 대상면적 확대(18천ha → 57) 추진

\* '12년 이후 조건불리직불금 단가 인상 : 농지 40만원/ha → 80, 초지 20 → 40

□ 한미FTA 발효에 대비하여,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등 피해 보전장치는 제도를 보완하여 확대 편성

<참고>

## ‘경영 및 소득안정’ 분야 투융자 조정 개요(‘08~‘13)

① 주업농 소득안정 : 128,953억원 → 103,685 (25,268억원 축소)

-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쌀소득 보전직불(△14,359억원), 친환경 축산직불(△7,006) 등 축소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상한 설정으로 인한 절감액과 당초 과다 책정된 직불금 축소 조정
  - 친환경 축산직불사업 중단(‘07)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 지연(‘07년 도입 → ‘10년 시범사업)

② 수급 및 가격안정 : 22,974억원 → 16,389억원 (6,585억원 축소)

- 확대 : 채소수급안정(1,614억원 증액), 원유수급안정(400) 등
  - 채소수급안정사업은 계약재배 물량 확대, 원유수급안정사업은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원유수급 불균형 심화에 대비 증액 편성
- 축소 : 축산물 자율수급조절지원(△2,000억원), 채소계약재배 안정화(△1,942), 임업경쟁력 제고(△658), 농산물 자조금조성(△950), 송아지 생산안정(△1,971), 과수원정비지원(△716) 등
  - 축산물 자율수급조절지원 사업의 중단(‘05)
  - 송아지생산안정은 당초 과다 계상된 것을 축소(발동요건 미충족)
  - 채소계약재배 안정화, 농산물 자조금, 임업 경쟁력 제고사업, 과수원 정비지원 등의 사업은 과거실적 저조로 축소 편성

③ 경영안정 강화 : 73,053억원 → 58,286억원 (14,767억원 축소)

○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2,637억원 증액), 이차보전(2,886억원), 농업경영 회생자금(500) 등

- 재해보험은 가입률 증가(매년 2%P 상향) 및 30개 품목으로 조기확대('13년 → '11) 등으로 증액, 이차보전은 정책자금 수요증가 감안
- 농업경영회생 자금은 자연재해 및 개방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에 대비하여 연간 1,000억원 수준 반영

○ 축소 : 농지비축사업(△18,600억원), 가축공제지원(△2,190)

- 농지가격하락에 대비한 농지비축사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시행 시점을 연기('09년 → '12)
- \* 농지비축사업에 포함된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은 연간 1,000억원에서 1,200억원 규모 유지
- 가축공제지원사업은 재해보험으로 일원화 등에 따라 대폭 축소

④ 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직불 : 13,324억원 → 5,914 (7,410억원 축소)

○ 조건불리직불(△7,864억원)은 본 사업추진('06)에 맞춰 대상면적을 확대(경사도 14%이하 → 7%)하고 단가를 인상(40만원 → 70)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진행상황 점검·평가 후 개선기로 함('12 이후)

○ 경관보전직불(454억원 증액)은 지원대상 면적 확대(18천ha → 57)

⑤ 수입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 1,029억원 → 11,200 (10,171억원 증액)

○ 한미FTA로 인한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피해보전직불(7년), 폐업지원(5년)에 각각 매년 1,000억원 수준을 반영(예비적 성격)

- FTA피해보전직불(5,507억원 증액), 폐업지원(4,664)

## 3

## 농식품 안전 및 유통 혁신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04~'07			'08~'13			'04~'13		
	계획	예산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계	41,752	36,518	△ 5,234	61,450	82,977	21,527	103,202	119,495	16,293
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3,249	5,553	2,304	5,502	13,529	8,027	8,751	19,082	10,331
○ 농산물 안전성 관리	476	593	117	919	1,853	934	1,395	2,446	1,051
○ 시도가축방역	1,392	2,319	927	2,430	5,247	2,817	3,822	7,566	3,744
2. 친환경·고품질 농식품 공급	7,130	5,498	△ 1,632	14,669	15,704	1,035	21,799	21,202	△ 597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0	163	163	0	1,938	1,938	0	2,101	2,101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유통 활성화	0	0	0	0	312	312	0	312	312
3. 농식품 유통혁신	29,742	24,884	△ 4,858	37,198	50,552	13,354	66,940	75,436	8,496
○ 거점산지유통센터	528	884	356	432	1,274	842	960	2,158	1,198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0	22	22	0	164	164	0	186	186
○ 생산자단체 소비자유통망 확충	0	440	440	0	3,480	3,480	0	3,920	3,920
4. 식자재·외식산업 육성	317	125	△ 192	771	1,885	1,114	1,088	2,010	922
○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0	0	0	0	480	480	0	480	480
5.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1,314	458	△ 856	3,310	1,307	△ 2,003	4,624	1,765	△ 2,859

□ GAP, HACCP, 이력추적제, 잔류농약 검사 등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안전관리 분야 증액

○ 시·도 단위의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 억제

□ 친환경·고품질 농식품의 공급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및 소비자유통망 확충 지원 등 확대

□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거점산지유통센터 확충, 브랜드경영체 육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유통망 등 확대

○ 한식 세계화 신규지원 추진('08 이후)

□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는 당초계획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축소



<참고>

##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분야 투융자 조정 개요(‘08~‘13)

① 농축산물 안전관리 : 5,502억원 → 13,529 (8,027억원 증액)

- 확대 : 농산물 안전성 관리(934억원 증액), 시도가축방역(2,817), 수의과학기술개발(1,080), 육류생산이력사업(699) 등
  - 시도가축방역은 돼지콜레라 청정화 대책(‘09~‘11) 등과 같은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 대책 추진 소요 반영
  - 농산물 안전성 관리는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조사를 위한 기기 및 인력 확충, 육류생산이력은 ‘08년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투융자 규모 증액
- 축소 : 가축질병근절 지원(△107억원) 등
  - 지난 3년간(‘04~‘06) 실제 소요액을 토대로 사업규모 일부 축소

② 친환경 농식품 공급 : 14,669억원 → 15,704 (1,035억원 증액)

- 확대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1,938억원 증액),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312), 조사료생산(2,896) 등
  - ‘10년까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선도조직 20개 육성 소요반영
  - 고품질 한우 생산 등 품질고급화를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조사료(청보리) 재배면적을 ‘15년까지 100천ha(‘06:9천ha)로 확대 지원
- 축소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4,500억원) 등
  -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경우,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폐지

③ 농식품 유통혁신 : 37,198억원 → 50,552 (13,354억원 증액)

- 확대 : 산지전문조직(10,331억원 증액), 표준규격 공동출하(2,802), 식품클러스터(549), 거점APC(842), 소비자유통망(3,480) 등
  - 산자유통전문조직은 과거 4년간('04~'07) 여건 미비 등으로 지원하지 못한 자금 등을 후반기('08~'13)에 지원
  - 표준규격 공동출하는 '08 이후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별도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여 '08~'13년 소요예산 반영
  - 광역식품클러스터 신규구성(1개), 한미FTA대책으로 거점APC 추가 조성(2개), '15년까지 주요 도시에 종합 농산물 판매장 200개소 육성
- 축소 : 과실수급안정(△1,900억원), 농산물 산자유통센터(△202), 농산물 물류표준화(△1,180) 등
  - 과실수급안정은 유사사업인 산자유통종합자금에 통폐합('07 이후)
  - 농산물 산자유통센터는 소규모 APC간 통합 및 연계사업 강화, 거점 APC 사업확대 등에 따라 축소

④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 771억원 → 1,885 (1,114억원 증액)

- '08 이후 한식세계화 신규 추진(480억원) 등에 따라 증액

⑤ 건강식생활 교육홍보 : 3,310억원 → 1,307 (2,003억원 축소)

- 확대 : 농축산전시홍보관(30억원 증액) 등
  - 농축산 전시홍보관 지원을 위해 관련 신규사업 반영
- 축소 :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2,244억원, 3개 사업) 등
  - 사업추진실적 부진, 유사사업간 통폐합 등으로 투융자 조정

## 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04~'07			'08~'13			'04~'13		
	계획	예산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b>계</b>	<b>50,593</b>	<b>49,636</b>	<b>△957</b>	<b>128,979</b>	<b>131,389</b>	<b>2,410</b>	<b>179,572</b>	<b>181,025</b>	<b>1,453</b>
<b>1. 복지여건 개선</b>	13,849	11,966	△1,883	32,983	28,811	△4,172	46,832	40,777	△6,055
○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5,737	3,834	△1,903	14,649	9,440	△5,209	20,386	13,274	△7,112
○ 농어촌복지여건개선	500	0	△500	4,000	2,500	△1,500	4,500	2,500	△2,000
<b>2. 교육여건 개선</b>	5,695	2,724	△2,971	21,758	4,871	△16,887	27,453	7,595	△19,858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3,000	1,058	△1,942	19,000	0	△19,000	22,000	1,058	△20,942
○ 농촌대학생 기숙사 설립	0	0	0	0	780	780	0	780	780
<b>3. 기초생활환경 정비</b>	<b>10,661</b>	<b>18,987</b>	<b>8,236</b>	<b>11,026</b>	<b>26,582</b>	<b>15,556</b>	<b>21,687</b>	<b>45,569</b>	<b>23,882</b>
○ 농어촌주택개량	1,380	1,310	△70	2,400	3,500	1,100	3,780	4,810	1,030
○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672	7,183	5,511	0	8,310	8,310	1,672	15,493	13,821
○ 농어촌지방상수도	2,983	4,782	1,799	4,542	9,056	4,514	7,525	13,838	6,313
<b>4. 마을·면단위 종합개발</b>	<b>14,960</b>	<b>9,212</b>	<b>△5,748</b>	<b>46,960</b>	<b>41,669</b>	<b>△5,291</b>	<b>61,920</b>	<b>50,881</b>	<b>△11,039</b>
○ 농촌마을종합개발	11,418	2,323	△9,095	40,274	15,973	△24,301	51,692	18,296	△33,396
○ 정주권·오지면 개발	1,500	5,460	3,960	3,000	20,832	17,832	4,500	26,292	21,792
<b>5. 농촌자원 산업화</b>	<b>5,428</b>	<b>6,747</b>	<b>1,319</b>	<b>16,252</b>	<b>29,456</b>	<b>13,204</b>	<b>21,680</b>	<b>36,203</b>	<b>14,523</b>
○ 농촌활력증진(지역특화+신활력)	3,300	4,898	1,598	12,000	24,658	12,658	15,300	29,556	14,256

- 복지여건 개선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축소 등으로 감소
  - 다만, 향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을 감안, 매년 500 억원 수준의 농촌복지여건 개선 사업 발굴·지원('08~'13)
- 교육분야는 초·중·고 교육의 지방이양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 축소
- 주택, 상하수도 농촌 기초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지속 확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미비 등을 감안, 사업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13까지 투융자 축소)
- 농촌자원 산업화는 2단계 신활력 사업추진('08~'10) 등으로 증액

<참고>

## ‘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투융자 조정 개요(‘08~‘13)

### ① 복지여건 개선 : 32,983억원 → 28,811 (4,172억원 축소)

- 확대 :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2,590억원 증액), 취약농가 인력지원(1,465), 농업인 재해공제(안전공제 등) 지원(410) 등
  -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의료장비 등을 확충
  - 사고·고령 농가에 대한 가사지원사업을 ‘06이후 신규 반영
  - 농업인 안전공제 보장수준 강화 등으로 가입율(‘06 : 37%)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공제료 부담액 증액
- 축소 : 건강보험료(△5,209억원), 영유아 양육비(△1,051) 등
  - 당초(‘04)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직장의료가입자 등을 제외하여 지원대상을 축소(당초 : 130만 세대 → 수정 : 50만 세대 수준)
  -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농가를 5ha미만 농가로 한정, 투융자 축소

### ② 교육여건 개선 : 21,758억원 → 4,871 (16,887억원 축소)

- 확대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2,686억원 증액), 대학생 기숙사 건립(780) 등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 대학생의 10% 수준까지 확대(‘11)
- 축소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19,000억원), 고교생 학자금 보조(△1,135) 등
  - 초·중·고 교육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쪽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정부 투융자 규모 축소(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 내국세의 19.4% → 20.0)

③ 기초생활환경 정비 : 11,026억원 → 26,582 (15,556억원 증액)

○ 낙후된 농촌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등 투자 확대

- 농어촌 주택개량(1,100억원 증액), 농어촌 하수도 정비(8,310), 농어촌 지방상수도(4,514) 등

④ 마을·면단위 종합개발 : 46,960억원 → 41,669 (5,291억원 축소)

○ 확대 : 지역개발인프라(정주권·오지 개발, 17,832억원 증액)

- 정주권개발의 재원이 변경되고(양여금 → 균특), 오지개발사업이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투융자계획에 신규 편입

○ 축소 : 농촌마을종합개발(△24,301억원), 산촌종합개발(△82)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의 추진여건 미흡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한을 연장('13년 → '17)

⑤ 농촌자원 산업화 : 16,252억원 → 29,456 (13,204억원 증액)

○ 확대 :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201억원 증액), 농촌활력 증진(12,658),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676) 등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 테마공원사업 신규 추진
- 제 2단계 신활력사업('08~'11) 추진 등으로 농촌활력증진 증액
-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축소 : 녹색농촌체험마을(△153억원)은 현지추진여건 미비 등을 감안, 사업기한을 연장('13→ '17)

## 제4편

### 주요 품목별 대책

## 주요 품목(산업)별 대책(요약)

품목 (‘05 생산액)	주요 대책방향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까지 한우 브랜드 출하비율 50%로 확대</li> <li>○ ‘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li> <li>○ ‘13년까지 돼지고기 브랜드 출하비율 70%로 확대</li> <li>○ ‘13년까지 닭·오리 계열화 사육비율 80%로 확대</li> <li>○ ‘13년까지 조사료 재배면적 220천ha로 확대(‘06년 146천ha)</li> <li>○ 축산시설현대화자금의 일정비율 국고 보조</li> </ul>
원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까지 과수전업농(1.5ha이상) 22천농가 육성(50% 이상 담당)</li> <li>○ ‘13년까지 거점 산지유통센터 구축(20~25개소)</li> <li>○ ‘13년까지 채소·특작 브랜드 경영체 25개소 육성(15% 담당)</li> <li>○ ‘13년까지 원예전문 생산단지 200개소 육성</li> <li>○ ‘13년까지 수도권 화훼 종합유통센터 조성</li> <li>○ ‘13년까지 32개 품목 자조금 조성 및 수출 확대</li> <li>○ 원예시설현대화자금의 일정비율 국고 보조</li> </ul>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까지 6ha 수준 7만호 육성(50% 이상 담당)</li> <li>○ 종자보급률을 50% 수준으로 제고</li> <li>○ ‘13년까지 RPC 계약재배를 70%로 확대(‘13년 539천ha)</li> <li>○ 농협 RPC 통합(182개소 → 100개소)</li> <li>○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li> </ul>

# I. 축산업 대책

## 1. 2013년 비전

구 분	2006년	2010년	2013년
<b>◆ 전업농수(천호)/생산 비중(%)</b> ○ 한우(50두 이상) ○ 돼지(1천두 이상) ○ 닭(3만수 이상) ○ 낙농(50두 이상)	16/66 7.2/34.5 3.1/80.0 1.5/75.8 4.4/73.9	20/75 10.6/51.0 3.6/88.0 1.8/78.8 4.7/83.1	24/82 12.9/66.6 4.1/92.0 2.1/81.1 5.0/90.0
<b>◆ 축종별 주요 비전</b>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 돼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 ○ 육계 계열화비율(%) ○ 우유 1등급(체세포수)비율(%)	44.5 51.0 72.0 50.3	50.0 64.0 76.0 75.1	55.0 70.0 80.0 84.0
<b>◆ 농가수(천호)</b> ○ 한 우 ○ 돼 지 ○ 닭 ○ 낙 농	190 113 3.6 8.3	149 9.7 3.2 7.3	131 8.4 2.1 7.0
<b>◆ 사육두수</b> ○ 한 우(천두) ○ 돼 지(천두) ○ 닭(만수) ○ 낙 농(천두)	2,020 9,382 11,918 464	1,989 9,133 12,243 449	1,850 8,854 13,012 439

\* 전업농 소득은 전업농 사육 기준두수가 아니라 평균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2. 현황 및 여건변화

- 축산업 생산액은 쌀 생산액 8.5조보다 3조원이상 많은 11.7조원('06년)으로 전체 농림 생산액(36.3조)의 32.1%를 차지
  - 축산업 생산액 증가추세 : ('96) 6.9조원 → ('03) 8.9 → ('06) 11.7
  - '06년 농림업 10대 주요품목 대부분을 축산물이 차지
    - : ①쌀 ②돼지 ③한우 ④우유 ⑤ 닭 ⑥계란 ⑦수박 ⑧건고추 ⑨딸기⑩인삼
  
- 상당 폭의 시장개방에도 불구, 규모화·품질 고급화, 안전성 제고와 친환경축산 확대로 생산기반 유지
  - 자급율('06) : 쇠고기 47.9%, 돼지고기 76.7, 닭고기 81.9, 우유 71.0
  - 전업농수/비중 증가 : ('96)6,405호/29.9% → ('03)13,740/60.0 → ('06)16,164/65.7
  -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 ('96) 19.4% → ('03) 33.3 → ('06) 44.5
  - 한우수소(18개월)체중 : ('96) 496kg → ('06) 567 (연평균 7.1kg증량)
  - 브랜드 사육비중 (한우/돼지) : ('03) 17.4%/41.4% → ('06) 32.2/50.9
  - 쇠고기이력추적제시범사업('07.12 730천두), 음식점원산지표시제 ('07.1.1부터 300m<sup>2</sup>이상 음식점 대상) 도입
  -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대책 수립 및 축산자원순환과 신설
  
- 이러한 성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농가의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면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결과

- 위기 : WTO 체제 출범, 외환위기, 축산물 완전 개방, 가축질병 발생 빈번, 한·칠레 FTA 체결
  - '97년 돼지·닭고기 완전 개방, '01년 쇠고기 수입쿼터 폐지이후 일정 관세로 수입 자유화
  - 구제역('00, '02), 고병원성 AI('03, '06), 돼지콜레라('99년말 청정화 이후 '02년 재발) 등으로 수출중단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 초래
- 기회 : 국민소득 증가로 축산물 소비 증가, '03년말 BSE 발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 1인당 육류 소비량 증가 :('96) 28.8kg → ('03) 33.3 → ('06) 33.6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후 한우 사육두수 지속 증가('03:1480만두 → '06: 2,020), 돼지고기 가격 상승 ('03:164천원/두 → '06:248)
- 여건 변화 :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소비자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 돼지분뇨발생량 : ('96) 1,292만톤 → ('03) 1,811 → ('06) 1,845
- 그러나 향후 우리 축산업에는 더 많은 제약 요인이 놓여 있어 그 기반을 유지·확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재개시 한우·양돈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한미 FTA로 연평균 생산액 4,664억 감소, 한·EU FTA등 개방 확대
  - AI, 소부루세라병, 돼지소모성질환 등 가축질병으로 농가피해 우려
  - 세계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농가부담 가중
  -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 규제 더욱 강화 전망
  - '12년에 가축분뇨('06년 배출량 : 261만톤) 해양배출 전면 금지

### 3. 향후 정책방향

#### 한육우

##### □ 세계 최고 품질의 한우고기 생산 뒷받침

- 브랜드 공동사육시설 조성, 선정기준 강화로 **광역화·규모화 유도**
  - 브랜드 경영체 위주 정책자금 지원, **브랜드 사육비율 제고**
  - \* 브랜드 사육비율 : ('06) 32.2% → ('13) 50
- 우수 종축선발로 **우량 정액 공급 및 암소개량 체계 강화**
  - 유전평가를 부계에서 모계혈통까지 확대, 우수한 보증씨수소 선발
  - 우량 씨암소를 다산우로 지정, 지속적인 번식 활용(5산이상유도)
- 비육기간 연장, 모든수소 거세 등 **비육관리강화**로 육질 개선
  - \* 쇠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 : ('06) 44.5% → ('13) 55

##### □ 소값하락을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극복

-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사료작물 자급도 제고
  - \* 조사료(청보리) 재배면적 : ('06)146(9)천ha→('10)192(50)→('13)220(80)
- 비육용 송아지를 자가 생산체계로 전환하여 구입비 절감

##### □ 둔갑판매 방지, 위해요소 차단 등을 통한 수입육과 차별화 도모

- '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계적 확대(300m<sup>2</sup> → 100m<sup>2</sup>이상)
-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단계 **HACCP 정착**으로 위해요소 차단
- **브랜드육 타운 조성** 등 경쟁촉진으로 소비지 유통 개선

## 돼지

- 우리 입맛에 맞는 최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브랜드 경영체 위주로 지원, '13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70%까지 확대('06 : 51%)
  - 종돈 경제능력검정 확대 및 인공수정센터에 고능력 씨수돼지 구입비 지원을 통한 우수정액 공급 강화
  - 품질 고급화 유도를 위해 육질 등급 판정제 도입('07.7) 확대
  -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 등을 위한 생축 운반차량 지원
- 사육여건 개선 및 질병예방으로 생산성 향상
  - 단열, 악취저감, 환기개선 등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전업규모이상, 브랜드 참여농가의 HACCP 적용조건으로 지원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조기 근절
    - \* 모돈당 출하두수 : ('06) 13마리 → ('13) 17
- 위생적이고 깨끗한 친환경 양돈산업 기반 조성
  -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밀집사육지역, 중대규모농가) 및 공공처리시설(소규모영세농가) 확충
    - 공공자원화시설('07년 5개소, '08년부터 연간 15개소), 공공처리시설(50→71개소)
    - \* '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연간 50만톤씩 단계적 감축 추진(총 261만톤)
  - 액비유통센터 설치('12년 140개소) 및 액비살포비 지원 등을 통해 퇴액비 이용 활성화
    - '10년까지 50개소의 경종·축산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 체결(현재 18개소)

## 가금

### □ 계열업체 중심의 브랜드화로 품질 고급화 추진

- '13년까지 육계 우수 브랜드를 확대하고 정책지원 강화로 계열화 사육비율을 83%로 확대(현재 72%)
  - '08년부터 브랜드 인증대상에 계란·오리 포함
- 계열업체 중심으로 가금 운반 전용 차량 지원('08년부터)
- 계란·닭고기 등급판정 확대를 통한 품질고급화 유도
- 선도업체 중심의 집하장 육성으로 고품질의 계란 공급

### □ 축사 시설 현대화, 우량 종축 공급 등으로 생산성 향상

- 노후화된 축사의 현대화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도모
  - 닭·오리 전업농 대상, HACCP 적용조건으로 지원
- 종계 유통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우량 종계 유통질서 확립
  - 종란과 병아리 혈통인증서 발급 의무화 및 종계장·부화장 점검 강화
  - 원종오리 전문생산 농장 육성을 통한 종오리의 안정적 공급
- 종계장, 부화장을 대상으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종계 DB 구축

### □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한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 추진

- 사육단계 HACCP 도입('08)으로 국산 가금육의 신뢰도 제고
-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09)로 수입육과 구분 유도
- 계란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포함 추진, 단속 강화
- 삼계탕 등 질병 영향을 적게 받는 가공축산식품 수출 확대

## 낙농

- 원유수급관리제도 개편 등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 수급조절을 위한 쿼터관리, 집유체계 개선, 잉여우유 처리 및 감축방안 등 마련
  - 생산자와 유업체간 상호 협의하에 제도개선 추진 유도
- 개량강화, 가격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 도모
  -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400호, 20천두), 젖소개량의 핵심역할을 담당토록 지원
  - 유지방위주의 우유가격 산정체계를 유단백, 체세포, 세균수를 함께 고려한 성분가격체계로 개편 추진
- 축사 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확충 등으로 생산비 절감
  - 전업농가 위주로 장비 및 시설현대화 지원, 관리비 절감과 질병발생 최소화 도모
  -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사료작물 자급도 제고
    - \* 조사료(청보리) 재배면적 : ('06)146(9)천ha→('10)192(50)→('13)220(80)
- 신규 수요 창출 등 유제품 소비촉진 노력 강화
  - 낙농체험·관광목장 지원('08)으로 도시민의 낙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새로운 수입원 개발 및 유제품 소비 확대 도모
  - 학교우유 급식사업 대상 및 급식인원 확대 지속 추진
    - 급식률(%) : ('05) 47.6 → ('10) 58 → ('13) 61.5
  - 기능성 유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소비계층 확대 도모

## II. 원예산업 대책

### 1. 2013년 비전

구 분	2005년	2010년	2013년
◆ 농가수(천호)			
○ 양념채소	900	700	500
○ 시설채소	66	63	61
○ 인삼	14	13	13
○ 화훼	13	13	14
○ 과수	240	210	180
◆ 전업농수(천호)/생산비중(%)	72/41	79/46	87/50
○ 양념채소	7.5/11.1	10.0/15.0	12.0/20.0
○ 시설채소	29/43.9	30/47.6	32/52
○ 인삼	0.7/21.3	1.4/30.0	1.8/42.0
○ 화훼	9.4/80	10.6/85	11.6/90
○ 과수	18/41	20/46	22/50
◆ 전업농 소득(백만원)			
○ 양념채소	32	42	50
○ 시설채소	39	50	56
○ 인삼	52	60	66
○ 화훼	37	51	70
○ 과수	45	55	61

주] 양념채소 전업농 기준 : 1ha 이상 재배농가(양념채소는 대부분 겸업농 형태)  
 화훼 전업농 기준 : 화훼재배 소득이 농가소득의 60%이상인 농가

## 2. 현황 및 여건변화

□ DDA, FTA 협상 추진 등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원예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수출확대도 가능

○ 원예작물은 환경친화적 고품질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 제고 필요

○ 화훼류의 품종개발로 종묘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기능성이 강화된 인삼 품종과 가공기술 개발 필요

□ 정부·지자체 품질인증 등이 확대되어, 브랜드 농산물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 인지도는 낮음

○ '04년말 기준 농축산물 브랜드 5,428개중 원예분야는 1,130개로 그 중 등록된 브랜드는 239개(21%)에 불과

· 부류별 : 과채류 851개(79%), 양념채소 및 엽채류 233개(21%)

· 품목별 : 딸기 181개, 토마토 143, 오이 111, 수박 68, 풋고추 69

□ 과수산업은 많은 농가가 종사하고 있지만 경영 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되어 산업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에는 한계

- 재배농가수 : ('90)241천호 → ('00) 251 → ('02) 247

\* 우열농가(상하위 10%) 소득차 : 배 15배, 사과 10.5, 감귤 9.4 포도 4.4



□ 시설원예농업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가중 전망

○ 주요 시설원예작물의 경영비중 난방비 비중

(10a기준)

구 분	경영비(A)	유류비(B)	비 율(B/A)
오 이	9,904천원	2,881	29.1%
풋 고 추	7,178	1,967	27.4
토 마 토	5,887	1,305	22.2
장 미	16,866	5,178	30.7

\* '04시설작물별 난방비 분석자료('05.10, 농촌진흥청)

\* 면세경유가격(원/ℓ) : ('02) 365→('05) 496→('06.10) 613 ('05대비 24%인상)

○ 친환경 재배 및 고사포닌 함유 인삼 재배를 확대하고 항암물질 등 특이성분을 극대화

□ 인삼, 화훼류 등은 소비 증가로 인해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

○ 인삼은 타작물에 비해 소득이 높고 최근 웰빙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배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

- 연도별 재배면적 : ('98)10천ha → ('00)12 → ('04)13 → ('05)14

○ 화훼산업은 정부의 생산·유통기반 지원 등으로 '90년대 이후 지속적 성장

- 화훼생산액 : ('90) 2,383억원 → ('00) 6,966 → ('05) 10,105

- 재배농가수 : ('90) 8.9천호 → ('00) 13.1 → ('05) 12.9

\* 주요 수출품목인 절화류와 난류는 일본, 화란, 독일 등의 육성 품종

### 3. 향후 정책방향

#### 양념·시설채소

-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양념채소는 브랜드 경영체에 생산·가공시설, 마케팅비용 등을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
    - \* 원예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 ('07) 2개 → ('13) 30
  - 시설채소는 원예전문생산단지중 수출잠재력이 있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지원
    - \* 원예전문단지 육성 : ('06) 149개소 → ('17) 200
    - 에너지절감 시스템, 복합환경조절 시스템, 시설구조개선
-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어 우량 품종 개발·보급
  -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 생산비절감 도모
  -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만생 신품종을 조기에 육성
  - 마늘은 주산지 중심으로 우량 씨마늘 보급 확대
- 품목별 자조금 조성, 계약재배 면적 확대 등 수급안정 도모
  - 품질제고에 중점을 두고 품목별 자조금 조성지원 확대
    - \* 자조금 조성 : ('00) 2개품목 → ('06) 21 → ('13) 32
  - 식품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사업주체를 다양화 하고 계약재배 면적 확대('06:11%→'17:24)

## 인삼

-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인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
  - 재배단계 생산이력관리를 실시하고 가공·유통단계에서 이력 추적관리(Traceability)와 연계하여 품질경쟁력 제고
    - \* 계약재배 이력추적관리(전체 재배면적 대비) : ('07) 10% → ('17) 40
  - '13년까지 안전성 조사를 ha당 1점 이상으로 확대 안전성 강화
- 주산지 기존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된 인삼 수출전문단지 신규 육성
  - \* 인삼 수출단지 육성 : ('08) 4개소 → ('13) 15 → ('17) 20
  - 우량묘삼생산, 생력화, 제품생산·판매 및 마케팅기법 등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등 일괄지원
- 내병성 고사포닌 신제품 개발 및 대량증식 기술·보급
  - 고사포닌, 내병성 품종육성 : ('07) 5개 → ('13) 8 → ('17) 10
- 생산비 절감 추진을 위해 파종·수확기 등 기계화율 등 제고
  - 기계화율 제고 : ('06) 40% → ('13) 50 → ('17) 70
    - \* 인삼 방제기, 수확기 등 신제품 현장접목연구 후 보급
    - \* 공동이용기계는 임대사업, 개별이용기계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화 휘

### □ 화 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품종 개발·보급 확대

○ 장미, 국화 등 품종육성 사업단 설치 지원 및 민간육성사업 지원 확대

- 품종육성 사업단 지원 : 연 10억원수준/10년간 지원

- 민간육종가 신품종 육성지원('09~'10) : 68억원

○ 국내육성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육묘장 설치('08~'17) : 총 160억원

※ 국내 육성 우수품종의 보급률 확대 : ('05) 1% → ('17) 25

### □ 조직화·규모화된 화 휘 단지를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등 지원

○ 기존 화 휘 수출전문단지(30개소 내외)에는 신에너지 시스템, 단지 증·개축 등 시설 현대화 지원 ('17년까지 1,710억원)

○ 화 휘 브랜드 경영체 대상으로 공동선별장, 육묘보급 전시장 등을 패키지로 지원 화 휘 생산·유통·수출의 리더 그룹으로 육성

\*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 ('09) 1개소 → ('13) 8 → ('17) 15

### □ 선진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화 휘 종합유통센터 조성

○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 전국 3대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선진국 수준의 화 휘 종합유통센터 조성

\* 영남권, 호남권은 수도권 화 휘 종합유통센터 조성에 따른 결과 분석 평가 후 조성여부·시기 등 결정

###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사업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 규격품 출하, 수출지원 사업 등을 통한 수급조절 및 화 원과 연계한 관공서·음식점 등에 정기적 생화공급 추진

## 과 수

- 기존 전업농을 중심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감귤은 다공질필름 재배 면적 확대('06 : 5% → '17 : 38)
  - 사과는 저생산성 과원을 키낮은 사과원으로 전환('06:18% → '17:62)
  - 배·복숭아는 밀식과원 재배면적 확대('06:배 48%, 복숭아 15% → '17 : 89, 62)
  - 포도는 비가림시설 재배면적 확대('06 : 52% → '17 : 90)
    - \* 비가림시설 재배효과(포도) : 약제 살포(13→ 5회), 당도(13.7→14.4bx)
  
- 중앙묘목 관리센터에 병해충 검정장비 등을 확충하여 우량묘목 검사·증식 체계 구축
  - \* 우량묘목 공급 확대 : ('07상) 사과·포도 → ('07하) 복숭아, 단감, 배 → ('08) 감귤
  
-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 경영체 30개내의 육성을 추진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07 : 15개소 → '13 : 25 → '17 : 30)
  - 브랜드 경영체에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 지원
  - 감귤은 3~5개의 대표브랜드 육성을 지원
    - 노지 생산면적을 조정(△18~21%)하고 가공수요를 개발·확대
    - 고당도 생산비중을 현행 6%에서 50%까지 확대
  
- 품질 표시사항에 당도 기준 세분화 및 표시 강화
  - 3년간('08~'10) 실태조사를 거쳐 당도측정방법 및 표시기준 마련
    - \* 현행 품질 기준 : 고르기, 산도, 설탕, 당도, 크기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구분

### Ⅲ. 쌀산업 대책

#### 1. 2013년 비전

구 분	2005년	2010년	2013년
◆ 쌀 농가수(천호)	938	769	600
◆ 쌀 전업농(3ha이상,천호)	44	55	70
○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30	41	50
○ 쌀 전업농 호당 경지면적(ha)	4.2	5.3	6.0
○ 쌀 전업농 소득(만원)	4,253	5,300	5,900
◆ 쌀 재배면적(천ha)	980	899	843
◆ RPC 저장 능력(천톤)	1,444	2,054	2,397
○ 계약재배 면적(천 ha)	322	425	539
(비중, %)	33	50	70
◆ 쌀 대표브랜드	-	48개소	100개소
(비중, %)	-	28	50

## 2. 현황 및 여건변화

- '04년 쌀협상 결과에 따라 10년간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화를 재유예하여 관세화 대비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
  - 수입쌀 도입물량은 '05년 225천톤에서 '14년 408천톤으로 증량
  - 수입쌀중 소비자 시판물량은 '05년 수입쌀 도입물량의 10%에서 6년차 30%까지 상향조정하고 10년차까지 30% 유지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
  -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변동직불)를 도입
    - \* 목표가격은 3년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 \* 공공비축 수준(현 86만톤 수준)은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08년에 조정
  
- '05년 양정제도 개편 이후 수급에 의한 국내 쌀가격 형성 여건 마련 및 국제 쌀값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는 축소 경향
  - \* 국내외 가격차 : ('01) 4.8배 → ('02) 4.9 → ('03) 3.7 → ('04) 4 → ('05) 3
  
- 추곡수매제에서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였으나,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를 보완할 산지의 민간 유통기능은 취약
  - \* '05년 수확기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13.4%)
  - \* 농협RPC 가동율 : ('01) 47% → ('02) 44 → ('03) 45 → ('04) 48 → ('05) 42
  
-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 RPC 저장능력 : ('01) 20.0% → ('02) 24 → ('03) 26% → ('04) 28% → ('05) 31

### 3. 향후 정책방향

□ 관세화가 되더라도 우리 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품질브랜드 쌀 육성대책」을 추진

○ '13년까지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

\* 대표 브랜드 육성 목표(누계) : ('07) 8개 → ('08) 48 → ('13) 100

\* 브랜드쌀 취급비율 : ('07) 10% → ('08) 15 → ('10) 28 → ('13) 50

□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종자 공급 확대, RPC 중심 계약재배 확대, 수확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추진

○ '10년까지 보증종자 등 우량종자 공급을 60%까지 확대

○ '10년까지 고품질 RPC 계약재배 면적을 50%로 확대

\* 계약재배면적 : ('06) 353천ha(36%) → ('10) 425(50)

○ '13년까지 RPC 건조·저장시설 1,300개소를 신규 설치 지원하여 RPC 저장능력을 70% 수준까지 확대

□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기정착 도모

○ 소비량 변화 추세를 반영, 적정공공비축물량 재 산정 및 '08이후 3년간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 변경 국회동의 추진

□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생산·수급관련 쌀 관측제도 운영

○ 벼재배면적, 산지쌀값, 수급동향 등에 대해 농업인·RPC 등에 정보 제공하여 자율조정을 유도(분기별 정보 제공)

□ 수입쌀 관리제도 강화로 국내유통의 유통의 투명성 제고

○ 수입쌀과 국내산과의 차별유통으로 부정유통방지를 도모



## IV. 임업 대책

### 1. 2013년 비전

구 분	2005년	2010년	2013년
◆ 산림면적(천ha)	6,395	6,387	6,387
○ 국유림	1,454	1,570	1,670
○ 사유림	4,302	4,178	4,078
○ 공유림	477	477	477
○ 기 타	162	162	162
◆ 임산물공급(톤)			
○ 밤(생밤)	76,447	75,634	75,796
○ 잣	2,680	2,722	2,734
○ 대추	8,216	8,228	8,297
○ 호두	868	845	834
○ 표고	5,463	5,144	5,033
◆ 전문임업인소득(천원)	27,148	34,648	40,109
◆ 산림환경			
○ 물저장량(백만톤)	18,766	19,055	19,221
○ 휴양일수(천일)	92,571	102,000	107,000
◆ 기타 주요지표			
○ 임목축적(m <sup>3</sup> /ha)	80.8	94.0	101.9
○ 총목재수급(천m <sup>3</sup> )	22,945	23,823	24,342
○ 국내재생산(천m <sup>3</sup> )	2,350	3,063	3,314
○ 국내재자급율(%)	10.2	12.9	13.6

\* 2010년 및 2013년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예측결과임

\* 임가소득은 2005년 임가경제조사 연간 가구당 소득을 적용하였으며 2010년, 2013년은 2005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연 5%)을 감안한 추정치임

## 2. 현황 및 여건변화

- DDA/FTA 협상 등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목재류 및 단기 소득임산물 모두 큰 폭의 관세 감축 예상
  - 목재류는 UR당시 미양허한 합판, 섬유판 분야 개방 확대 전망
  - 밤, 대추 등 고관세 품목은 큰 폭의 관세 감축 및 시장접근 물량 증가 예상
  
- 주 5일 근무제, 웰빙 붐 등의 영향으로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임산물 품질의 차별화·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정 임산물 생산·가공기술 개발 및 명품화·브랜드화 추진 필요
  
- 국내외적으로 목재수요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재 생산량 증가로 이용 및 자급량은 점차 확대되고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
  - 국내재수급 : ('05) 2,350천m<sup>3</sup> → ('10) 3,063천m<sup>3</sup>
  - 국내재자급율 : ('05) 10.2% → ('10) 12.9%
    - \* '07년부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숲가꾸기 산물 수집단 운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약 2조원 규모이며, 대표적인 단기소득 임산물인 밤·표고의 경우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액은 감소추세로 가격경쟁력은 약화
  - 임산물생산액 : ('04) 1조8,328 → ('06) 1조 9,849억원(18%)
  - 밤(59천ha) : ('04) 71,796톤, 1,833억원 → ('06) 82,450톤, 1,512억원
  - 표고(2,616ha) : ('04) 5,338톤, 2,425억원 → ('06) 5,347톤, 1,969억원

### 3. 향후 정책방향

#### <기본방향>

- ◇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목재 수급기반 구축
- ◇ 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 버섯 생산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 ①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

-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및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경쟁력 제고
  - 제재소 등 목재가공시설 및 보드류 생산시설의 현대화 지원
    - \* 목재문화체험장·가공센터조성 : ('07) 3개소 → ('10) 52 → ('13) 10
  - 벌채 및 운반 장비의 기계화, 용도별·등급별 생산체계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
- 국산재 활용계획 수립 등 안정적인 목재수급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
  - 유통센터와 목재집하장을 국산재 생산·유통 중심지로 육성
    - 국산재 생산·소비 전망과 연계하여 권역별 확대('07년 18개소)
  - 간벌재 수집비 지원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이용 활성화
    - \* 산림바이오매스 : ('07) 80천 m<sup>3</sup> → ('10) 100 → ('13) 150
- 목제품품을 표준화·규격화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유통 촉진
  - 목재 품질인증 품목 확대 및 실내공기질 관련 친환경 목질 건축자재 인증제도 도입 추진
    - \* 목제품질인증 : ('05) 3품목 → ('10) 5 → ('13) 5

## ② 밤 품질 차별화를 통한 수출확대

### □ 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재배면적의 밤나무 집약관리

#### ○ 저수고 재배 등 집약적 기술재배 및 작업로 시설, 토양관리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저수고재배 : ('05) 1,500ha → ('10까지) 9,000 → ('13까지) 13,500

\* 밤작업로 : ('05까지) 7,010km → ('10까지) 10,910 → ('13까지) 12,860

\* 토양관리 : ('05까지) 12,348ha → ('10까지) 26,866 → ('13까지) 34,366

#### ○ 밤재배자의 현장애로 해소 및 기술·정보지원 강화

- 농한기를 이용, 현장순회 교육·전정기술 교육 강화 : 연2회 이상

#### ○ 친환경 방제시설 및 재배기술 개발 등 친환경 밤생산 기반 구축

\* 환경 밤생산 : ('05) 50ha → ('10까지) 500 → ('13까지) 800

### □ 유통구조 개선, 신제품 개발, 가공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밤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 공동선별, 공동브랜드화 출하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

\* 임산물산지유통센터조성 : ('05까지) 4개소 → ('10까지) 23 → ('13까지) 32

#### ○ 재배자가 선호하고 수출에 유리한 고감미·기능성 신제품 개발

\* 신제품개발 : ('05) 11품종 → ('10까지) 17 → ('13까지) 19

\* 밤가공 시설 : ('06까지) 1개소 → ('08까지) 2 → ('13까지) 3

### ③ 버섯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 □ 생산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여 경쟁력 확보

##### ○ 현대화된 시설재배 확대로 생산성과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 표고재배시설 : ('05까지) 1,918개소 → ('05까지) 2,376 → ('13까지) 2,589

\* 집단화·단지화 : ('05) 5개소 → ('10까지) 15 → ('13까지) 21

##### ○ 표고톱밥재배모델 개발·보급 및 톱밥재배시설비 지원 확대

- 표고자목 구입자금 융자지원 확대(3.0%, 3년 거치 2년 상환)

\* 톱밥배지센터 : ('05) 2개소 → ('10까지) 20 → ('13까지) 28

##### ○ 신제품 개발·보급, 재배관리기술 개발로 고품질 표고생산 체계 구축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 창출

-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적합한 종균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표고종균개발 : ('05까지) 19품종 → ('10까지) 21 → ('13까지) 22

-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 보급종균에 대한 유전자 지문 작성

\* 국내 개발품종(20종) 및 일본 등 도입품종(10여종) : '07. 12월까지

- 표고 신제품 육성 및 국내 유통표고 품종의 식별체계 구축('06~'10, 10억원)

#### □ 송이는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산 증대

##### ○ 송이생산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생산량과 수출이 감소 추세

##### ○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재배기술 개발로 생산 증대

\* 송이환경개선 사업 : ('02) 1,600 → ('13) 2,000ha

## 제5편

# 농업 · 농촌의 미래상

# I. 2013년 주요 정책 지표

---

## ①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중심의 경쟁력 있는 농업실현

### ○ '13년 50만 주업농 중심의 농업구조 실현

\* 주업농 50만은 '13년 90만 농가를 가정할 때, 70세 이상 고령(은퇴)농 30만, 취미·부업농 10만을 제외한 수치임

### ○ 농업생산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쟁력 향상

\* 축산전업농/생산비중 : ('06) 16천호/66% → ('13) 24/82

\* 과수전업농/생산비중 : ('06) 19천호/42% → ('13) 22/50

\* 쌀전업농/생산비중 : ('06) 80천호(평균 4.2ha)/32% → ('13) 70(평균 6ha)/50

※ 전업농 소득(쌀) : ('05) 42백만원 → ('13) 59

## ② 고품질·안전 농산물 공급확대로 소비자 식생활 수준 향상

### ○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률 : ('05) 97.7% → ('13) 98.0

### ○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 : ('06) 6.2 % → ('13) 10%

## ③ 농산물 생산성 향상,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축산, 원예 분야 생산성 향상 지원

\* 모돈당 출하두수 : ('06) 13마리 → ('13) 17 → ('17) 20

### ○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체계 구축

\* 브랜드 경영체('06→'13): 축산 73→ 80, 원예 5개 → 71, 식량 8개 → 120

### ○ 한식세계화·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 ('06) 25억불 → ('13) 40

## ④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향토산업과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농촌

### ○ 농촌경관개선, 농촌체험마을 확대 등 농촌관광 활성화

\* 국내관광에서 농촌관광 비중(관광객) : ('05) 15% → ('15) 28.6

### ○ 공공의료 시설·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초인프라시설 확충

\* 상수도 보급률 : ('05) 34.3% → ('15) 56.0

## II. 비전 2030 추진

### 1 비전 2030 추진체계





### ①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중심의 경쟁력 있는 농업 실현

-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3%수준인 선진국형 농업경영구조로 개편
  - \*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 ('05) 7.1% → ('10) 6 → ('20) 4 → ('30) 3
- 농업생산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쟁력있는 농업 실현
  - \* 쌀 전업농 생산 비중 : ('05) 30% → ('10) 41 → ('20) 60 → ('30) 79
- 농가소득은 규모 확대와 직불제 확충 등으로 도시기구소득과 균형 달성
  - \* 1인당 도농간 소득격차 : ('05) 95.2% → ('10) 98 → ('20) 102 → ('30) 105

### ② 안전하고 다양한 농식품 생산·공급과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여 세계 일류의 한국 식문화 창출

- 농식품의 친환경·고품질화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리 농식품
  - \*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률 : ('05) 97.7% → ('10) 97.9 → ('20) 98.2 → ('30) 98.5
- 바람직한 식생활 지침개발 및 올바른 식문화 운동 전개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형성으로 국민건강에 기여
- 한국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
  - \* 농식품 수출액 : ('05) 20.7억불 → ('10) 40 → ('20) 70 → ('30) 100

### ③ 도시수준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전통과 문화가 보전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공공의료 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 \* 상수도 보급률 : ('05) 34.3% → ('10) 60 → ('20) 90 → ('30) 100
  - \* 농촌주민의 삶의질 만족도 : ('05) 37.4% → ('10) 49 → ('20) 55 → ('30) 60
- 농촌경관개선, 농촌체험마을 확대 등을 통해 단순한 도농교류활동이 체류형 농촌관광으로 발전
  - \* 국내관광에서 농촌관광 비중 : ('05) 15% → ('10) 20 → ('20) 40 → ('30) 45